

제316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7 호

국회 사무처

2013년6월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익중) 추천안
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임창생) 추천안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나성호) 추천안
5.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 | |
|---|---|
|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의장 제의) | 1 |
|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익중) 추천안(의장 제의) | 1 |
| 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임창생) 추천안(의장 제의) | 1 |
|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나성호) 추천안(의장 제의) | 2 |
| 5.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2 |
| 6.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 |
| 7.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3 |
| 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4 |
| 8.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4 |

(10시09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김혜정, 김익중, 임창생, 나성호, 이상 네 분의 추천안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우택 의원, 간사에 김희국 의원, 김용익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강후 의원 대표발의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로 조세법 처벌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의장 제의)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익중) 추천안(의장 제의)
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임창생) 추천안(의장 제의)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나성호) 추천안(의장 제의)

(10시11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익중) 추천안,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임창생) 추천안, 의사일정 제4항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나성호) 추천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난 3월 제314회 국회(임시회)에서 개정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국회법 제 112조에 따라 전자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대출 의원, 이상일 의원, 임내현 의원, 윤후덕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전상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투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네 분을 추천하는 연기식 전자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4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안전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될 것입니다.

투표를 마치고 투표용지 투입 버튼까지 누르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0시14분 투표개시)

○**의장 강창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0시3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3표 중 가 156표, 부 71표, 기권 6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익중)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3표 중 가 164표, 부 61표, 기권 8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익중)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임창생)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3표 중 가 157표, 부 68표, 기권 8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임창생)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나성호) 추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3표 중 가 196표, 부 27표, 기권 10표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나성호) 추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5항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정우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정우택**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출신의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입니다.

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주의료원의 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지방의료원의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료원이 지방 거점 공공병원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 요구 및 열람,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및 감정, 조사에 관련된 기관 및 현장 방문 조사,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 등 조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은 2013년 6월 12일부터 2013년 7월 13일까지 32일간으로 하되 기관 보고를 2일간 받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진주의료원을 포함한 세 곳의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현장 검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계획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73인, 반대 6인, 기권 11인으로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7.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 운영위원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6항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윤상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윤상현 의원입니다.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한일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이어지는 등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국회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 관계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당국회담 추진 등 남북 관계 정상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2개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각각 18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강창희 그러면 먼저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6.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의장 강창희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강창희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오산 출신의 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누군지 인사를 하고…… 인사를 잘해야지.

인사를 안 하네」 하는 의원 있음)

이재오 의원님도 인사 안 하셨어요.

(웃음소리)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하는 결의문을 결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정치권에서 결정하신 점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전두환 씨, 그냥 전두환 씨라고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전두환 씨 은닉 재산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권재진 전임 장관으로부터 전두환 비자금 관련, 인수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다시 한 번……

○안민석 의원 전두환 비자금 관련, 전 장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보고내용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장관께 따로 인수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담팀에서 즉 추적을 하고 있는 내용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전두환 씨 딸 전효선 씨가 토지를 불법 증여받은 의혹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대강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내용요?

구체적인 자료를 전임 장관으로부터 제가 개개사안별로 인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그 토지가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미납 추정금을 집행하겠다고 질의했고 장관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난번에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정팀에서 노력을 했는데 찾아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검찰 조사는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추정반에서 추정 작업을 위한 조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조사를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 전두환 씨 자녀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민석 의원 대충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뭐, 마찬가지로입니다.

○**안민석 의원** 약 30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안민석 의원**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안민석 의원** 자녀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전두환 씨의 비자금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저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안민석 의원** 저 자료를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산과 안양 땅 둘 다 이창석 씨 본인의 돈으로 매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의 자녀들에게 거의 공짜로 주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째, 이 땅을 통해서 수십, 수백억 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부동산 투기의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뭐 그런 내용들은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안민석 의원** 아니, 다시 보여 주세요.
세 가지 공통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만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니까, 안 하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질의의 취지를 좀 정확하게 제가……

○**안민석 의원** 자, 보시면 안양 땅, 이창석 씨가 27살 대학생 때 샀어요. 저것 본인의 돈으로 샀겠습니까? 본인의 돈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뭐 동의합니다.

○**안민석 의원** 전두환 씨 자녀들에게 거저 주었다는 점도 동의하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글썄,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동의를……

○**안민석 의원** 저걸 보세요. 저것 언론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러 나왔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는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저걸 보세요.
둘째 전재용에게 400억짜리 땅을 28억에 주었어요. 거저 준 것 아닙니까?
전호선에게 200배 시세차익의 돈을, 이익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거의 거저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어서 저희도 조사를 그런 부분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자, 저 표에 보면 이창석은 명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명의 대리인을 시킨 사람이 두 땅의 소유자라고 추정하는데, 동의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 제가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안민석 의원**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

○**안민석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뭐 하러 지금 국회에 나와 계세요? 제 질의 중단할까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동의 여부를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저 그림을 보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자, 보세요. 저 그림 보시면 이창석은 명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장관 답변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안민석 의원** 이창석이가 명의 대리인이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민석 의원** 명의 대리인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니까 현 정부가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검찰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두 땅을, 전두환 두 자녀에게 헐값으로 매각한 이창석 씨가 소유한 토지는 이창석 씨 자신의 돈으로 매입하지 않은 이창석 씨는 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안민석 의원** 영동 ‘빨간 바지’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과문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들어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잘 못 들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고개를 끄덕임)

○**안민석 의원** 부동산업계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제가 그런 부분까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안민석 의원** 자, 다시 그림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970년대 어느 복부인이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부동산 투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빨간 바지는 당시 70년대 복부인의 대명사가 되어서 복부인들이 빨간 바지를 즐겨 입고 다녔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얘기가 회자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면 두 땅의 실소유자가 저 그림처럼, 계속 저 그림을 좀 보여 주세요, 두 땅의 실소유자가 빨간 바지 복부인일 가능성에 대해서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동안에도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를 죽 해 왔었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면 빨간 바지 복부인을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또 조사를 못 하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의원** 이렇게 검찰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전두환 씨 추정 시효 만료가 10월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10월 11일까지 전두환 씨의 재산을 일부라도 찾아 추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것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전두환 추정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물 건너간다고 볼 수가 있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전두환 추정법을 박근혜정부가 동의하지 못해서 법 통과가 불발되면 전두환 비호세력으로 지탄받게 될 텐데 비난 감수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가 그동안도 계속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 냈고 또 같은 시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대통령의 추정 미납금에 대해서는 거의 91% 이상을 추징을 해 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추적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핵심은 ‘빨간 바지’입니다.

검찰이 ‘빨간 바지’를 소환해야 됩니다. 소환하실 의사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찰이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추적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인 성함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민석 의원** 이규동이라는 장군입니다. 이분과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동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잘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도대체 아는 게 뭐세요? 질의서 미리 나눠 드렸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개인적인 관계를 제가 어떻게……

○안민석 의원 질의서 안 보세요? 준비 안 하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질의서 저한테 그런 것 준 것은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장인 친구의 딸이 되는 셈입니다.
관계상 맞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79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리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유사한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아, 유사한 취지는 됩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그동안 그때의 정확한 워딩을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민석 의원 그러나 당선 후 6개월이 되어 가는 현재까지 해당 문제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실천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대통령에게 신속히 6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안민석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6억 원은 박정희 대통령 금고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통치자금으로서 기업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모은 것일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정확한……

○안민석 의원 그 금고에 있던 9억 원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노력으로 번 돈은 아니겠

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기업을 해서 모았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게 뭐로 모아졌는지는 지금……

○안민석 의원 당시 9억 원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

○안민석 의원 예? 당시 9억 원이?

○국무총리 정홍원 그 계산을……

○안민석 의원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두환에게 받았다는 6억 원이 현재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글썽, 그것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제가 이것 어렵게 계산을 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32억 9000만 원입니다.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딸에게 준 돈이 지금 환산하면 33억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산 잘못됐어, 더 돼」 하는 의원 있음)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얼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나온 돈은 한 30억, 이십이삼억……

○안민석 의원 26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전 재산을 통틀어도 갚지 못할 빚을 갚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의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지금……

○안민석 의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상식적으로 빚을 33억을 졌는데 자기가 가진 재산이 20억밖에 없습니다. 이 빚을 갚는 게 가능하다고 상식을 묻는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가치를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 제가 어떻게 그걸 답을 합니까?
(장내 소란)
(「아니, 일개 국회의원이 재판까지 하려고 그래, 여기서?」 하는 의원 있음)

○**안민석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발언에 책임지겠습니다.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해서 79년 6억을 지금 계산해 볼 때 2013년 시점으로 32억 9000만 원입니다. 아니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비호하지 마세요.

자, 갚지 못할 빚을 국민들에게 무책임하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렇게 일방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공세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안민석 의원** 아니, 총리께서는 자신하고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6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6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지금 삼십몇억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까?

○**안민석 의원** 그러면 당시 1억짜리 집이 지금 1억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돈이 무엇의 성격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그러십니까?

○**안민석 의원** 아니, 총리님답지 않게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역정을 내는 게 아니라……

○**안민석 의원** 저는 물가상승률에 기준해서 환산한 겁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일방적으로 환산해 가지고 공세를 펴니까 저도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민석 의원** 아니, 국민들이 전두환 재산에 대해서, 이 추징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공세입니까? 제가 국민들의 이야기를, 국민들의 주장을 제 입을 대신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역정을 내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게 부정한 돈이니, 삼십몇억이 되었느니……

○**안민석 의원** 자, 그러면 제가 계산한 방법이 자의적이고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뭐가요?

○**안민석 의원** 이 논의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갚을 건지, 6억을 갚을 건지 33억을 갚을 건지 국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견해 어떠세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안민석 의원** 이런 대정부질문 뭐하러 하는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체부장관 나오세요.

늦게나마 장관 취임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 사진 하나 보시지요.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어보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누구의 어보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이것만 갖고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안민석 의원** 문정왕후의 어보입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LA주립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어떻게 미국의 박물관에 이것이 지금 전시됐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한국전쟁 전후 해서 다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알았습니다.

○**안민석 의원** 미군이 이 어보를 훔쳐간 겁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참 불행한 거지요. 미국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6·25 때 미군에 의해서 약탈돼 간 우리의 문화재가 한두 건이 아니라 수백·수천 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동안 개인기증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각국의 대사관 그리고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소재 문화재 환수하기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 재단 운영 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게 금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단 운영은.

○**안민석 의원** 해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공식적으로 그걸 대놓고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요 그걸 저희가 정부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그걸 한다고 알려지면 해외문화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미국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얼마큼 있는지 확인은 해 보고는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정확한 숫자는 물론 파악이 안 되고요.

○**안민석 의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부끄럽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렇습니다.

○**안민석 의원** 역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문제를 한미 간에 잘 풀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일단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조선시대 어진·어보 포함한 문화유산이 미국에 얼마나 있는지 그 실태조사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화재청…… 예,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안민석 의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국민들에게. 이걸 현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의 문제이기까지도 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남이 훔쳐 간 우리의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왜 주장을 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헨리 키신저 장관이 74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해외문화유산을 반환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반환된 문화유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안민석 의원** 자, 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델리아 홀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무부의 정식 기록이고요.

저 기록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미국에 와 있는 것들을 몇 개를 반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보가 반환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고 검, 칼, 왕관도 반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ooted by U.S. military personnel”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looted by”?

저것 한번 보세요. “looted by”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금……

○**안민석 의원** 다시 한 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looted by U.S. military” 저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지금 저, 미국 군사……

○**안민석 의원** 죄송합니다. 저게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기록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미군에 의해서 훔쳐 들어온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미국도 인정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안민석 의원** 이제 돌려받읍시다. 떳떳하게 정

당하게 자신 있게 돌려받으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지금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돌려받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안민석 의원 소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파악된 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대로 실태조사를 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제 그 시스템과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창희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노원갑 출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총리한테 마치 수사관처럼 수사를 하고 심리를 하고 재판까지 해서 집행까지 하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한다, 잘해!」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이나 하라고! 뭐하는 짓이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뭘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대정부질문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해, 사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옛날에 성수대교 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또 그 당시에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개 일어났습니다. 뭐,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정홍원 백화점이 하나 무너졌고 부산에서 철도사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예, 팔당대교도 무너졌고 신행주대교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90년대 아주 시리즈로 1년마다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총리께서도 서울시에 지하철이 많이 다닙니다마는 그중에서 1호선하고 4호선까지 이게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사실 압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취약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부처 간의 이전투구로 그것을 보수·보강, 성능 향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발단의 원인은 이게 2007년입니까, 8년도입니까? 지진재해대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서울시에 미루고 이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도시철도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건설 운영되는 시설물이고 운영 단계에서 내진 보강이나 시설 개량 등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는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노선에 대해서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기 건설 단계에서는 내진을 보강하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운영 주체인 지자체의 책임하에 잘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창희 의장, 박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노근 의원 총리께 그런 예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엄연히, 지금 건설 내용에는 성능 향상 이런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법령상에.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공무원들이

써 준 것 가지고 와서 읽는 것 아닙니까, 총리!

이것이 만일 어디에서 사고 나면, 지금 670여 군데가 크랙(crack)이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무너지면 어떤 사태가 납니까? 하루에 400만 명이 타고 다녀요, 1년 간 14억 명이 타고 다닙니다. 이것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기존 시설의 성능 개량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고……

○이노근 의원 지금 법에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써 준 문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읽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정치인들이 학교를 점령하려고 이렇게 온갖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학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 그리고 교과서 이것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돼 가고 있다는 사실 혹시 총리는 어디서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정확한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야당 의원님들도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제도 다 아시죠? 여기에 보면 시·도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좌지우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개 야당 의원님들이 가면 야당 쪽으로, 여당 의원이 들어가면 여당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리, 헌법상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교육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노근 의원 그러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어진 행위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학교시설과 학생, 참 기가 막힙니다. 작년 2년 전서부터인가 모 정치인이 대학을 무슨 청춘콘서트다 토크콘서트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서 교육을 빙자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기억나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노근 의원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님,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저희들 지역구에 와서 무려 1000여 명을 놓고서 무슨 토크콘서트를 하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떠듭니까?

그 사실 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들었습니다.

○이노근 의원 어떻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정홍원 정치적 목적하에 교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데 정치적 목적이라는 게 해석이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이지요. 우연히 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특정 업무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 여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전부터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 스토리가 여러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리기까지의 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당시에는 안철수 의원님이 아직 정계에 입문하시기 전이었는데 그때 죽 살아오신 내용들이 청소년들에게 많이 귀감이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아니, 그렇다면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검증 안 하고 제삼자가 써 놓은 것을 그대로 책에 갖다 실어 놓고 또 팩트 자체도 아닌 것을 갖다가 실어 놓고 그러면 어떻게 프로세스 과정이…… 걸러지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과서에 실리는 내용은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근 의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팩트가 아닌 것, 적어도…… 이게 아마 5년마다 바뀔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러면 팩트가 아닌 사실은 오

자, 탈자나 뭐가 됩니까? 그러면 교정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이노근 의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교과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것은 박경철, 앵커 분이가요? 그분이 쓴 글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이게 도서출판 디딤돌 같은데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증도 없이 그대로, 어디 글 쓴 것을?

또 이것은 금성출판사입니다. 국어교과서인데 이것은 내용조차 허위입니다, 허위, 상당 부분이!

그렇다면…… 아니, 학생들한테 허위에 기초한 교재가 발간됐는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을 그대로 왜 방치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출판사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아니, 작년에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민현주 의원님인가, 그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2월에 교재가 바뀔 때, 편성될 때 이 팩트가 아닌 것을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님이 아직 정계에 정식으로 입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이노근 의원** 아니지요. 이미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했고 또 입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국회의원 직전에 있었고 그러면 이미 정치인이지요. 콘서트하러 다니고 그러면 정치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

○**교육부장관 서남수** 새로……

○**이노근 의원** 반성하십시오,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 서남수** 사실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책이 16권이 있습니다, 16권. 도대체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특정인을 이상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교육부에서 방조를 합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 고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아니,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것을…… 교육부에 오래 계셨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확인하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검정된 교과서 내용은 출판사에서 집필자와 같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아니 그것이 매년, 5년마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팩트가 아닌 사실이 있으면 수정한다는, 다시 말해서 무슨 지침이라든지 이러이러한 것은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그 사실을 믿고서 ‘아, 그랬구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이노근 의원** 제가 장관님께, 만일 그 사실을 모른다면 제가 강의를 해 주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해 줄게요, 시간 내 주세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떠들지 말아요.

(웃음소리)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아까 학교운영위원이니 또는 이렇게 무슨 콘서트니 또는 정치를 가장한 이상한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은 반드시 교육부에서 제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게 허락 없이 했을 때는 어떤 문책을, 관련 교장이나 교육감이나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분명히 과당적·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말도록 헌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도 명백히 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이노근 의원** 그것을 왜 방치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또 한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요새 논란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교학사입니까? 거기에서 출판하는 책 중에 우리 안중근 의사를 무슨 테러니 유관순 의사

를 무슨 깡패니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 것이 검정에 통과됐다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언론기자와 얘기해서,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을 대변인이 발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한국사 해당 교과서는 검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검정 과정 중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내용은 사실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노근 의원** 사실이 아니면 최초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아마 인터넷일 겁니다. 인터넷의 최초의 발원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해당 출판사에서 인터넷에 게재한 분에게 항의를 해서 그 게재한 분이 사과를 하고 그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아니, 그것은 형사처벌로 다스려야지 그렇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을 단순히 무슨 흥미 위주로 볼 수는 없지요. 이것이 또 북한한테도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은 해당 출판사에서……

○**이노근 의원** 아니, 사과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요. 이것을 수사를 해서,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잘못됐다고 지금 인정을 하니까 의뢰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또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해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그 내용은 검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 내용은 저희 교육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그것은 검정이 끝날 때까지는 일체 대외적으로 유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아니, 수사권을 발동하는데 수사관은 알 수가 있잖아요, 수사상 필요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다른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저희가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까지도 검정 과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이노근 의원**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을 조사해

서 수사를 해 달라고 검찰에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사항은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노근 의원** 그렇게 교육부장관이 우유부단하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요, 점점 더. 분명히 태도를 하십시오. 저는 강력히 최초의 발언자를 찾아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사 문제가 많이, 필수과목으로 수능에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동북아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일본에서는 교과서법인가 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교과서의 기술기준, 검정기준 이런 내용이 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를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최근에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 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런 원론적인 선문답을 하지 마세요. 이거 한두 해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에, 에너지가 충천한 이 시기를 놓치면 이거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그래서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사편찬위의 한국사능력평가시험이라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있습니다.

○**이노근 의원** 또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익이니 토플이니 보잖아요? 그러면 기업체에 그것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시험이 면제되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우리 총리께서 주관해서 가지고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데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도 이런 것이 필요한 데는, 능력평가시험을 별도로 보라는 게 아니라 국사편찬위에서 나온 성적을 제시하면 간단하잖아요. 세상에 6·25가 된

지도 모르고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현충일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깊이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시간이 거의 끝나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최근에 보면 SOC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저는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아시안게임이다, 무슨 유니버시아드대회다, 무슨 올림픽이다, 이름도 못 대는 무슨 포물러원이다, 여수엑스포다……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유치해 놓고 돈 내놓으라는 얘기가, 돈 내놓아라.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을 조금 구슬러 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예산을 다 그리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대규모 국제행사가 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는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유치하는 것은 예산을 못 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특별법 만드는 것도 좀 저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노근 의원**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장관들이나 총리께서 답변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국회의원들이 그 사후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여기서. 그냥 선문답으로 대답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병석**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장과 경찰의 최고위직 간부의 지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의 관권선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내내 국가정보원이 국정 현안에 개입하고 정권 비판세력을 중복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들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면 과연 2013년의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는지, 역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역사적 과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 이후부터 장관께서는 국정원 헌정유린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지휘했다느니 또 박근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과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인하셨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정권을 위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진선미 의원** 하지만 언론에서는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황 장관께서 검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보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기사가 어떻게 났든지 저희는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서 최근까지도 수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의원** 하지만 언론들이 예측했던 대로 결과발표가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불구속하고, 결국 황교안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닐까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이 여러 번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검찰이 발표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 언론도 있고 또 그때 임박해서도 다른 얘기를 한 언론도 있기 때문에 언론의 발표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선미 의원**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언론에서 ‘장관이 저렇게 틀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 채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

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라도 해서 공소유지하려고 참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그렇습니까? 다른 수사팀 핵심관계자도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 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도 오보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제가 그렇게 좀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수사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 정략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 보신 기억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그 말은 장관께서 2005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언론에 한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그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수사 결과가 정략을 따르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자부하십니까? 만약 못 하신다면 스스로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잘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결론까지 같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장관님, 저는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구속수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청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한 근거가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과 동기 등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서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저는 여기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신병처리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아주 예외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 동안

원세훈 원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 사실 인정한 적 없고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기문란사건으로 엄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증거인멸의 혐의도 있었고요.

김용판 청장,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많습니다. 도주, 외국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불구속 수사의 근거가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이 법에서만, 구속요건 여부들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장관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 3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지금 사건은 국정원장과 경찰의 최고 수뇌부가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그들의 방어권은 보호하지 않지요? 그들이 유포했다는 허위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심기를 어지럽힌 꾀죄죄로 구속한 것 아닌가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구속도 되고 불구속도 되고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 그러니까요, 장관님. 그 사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누구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 한 번 얘기한 것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용판·원세훈 불구속입니다. 균형 있습니까? 검찰의 방어권 보장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사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비교하셔야지요. 그게 기준 아닙니까? 형량할 때는 비교하는 거지요, 사건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이 다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선미 의원** 다시 한 번 또 다른 문제 묻겠습니다.

원세훈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 중이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원세훈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수사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

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선미 의원** 물론이지 않겠지요.

제가 하나 더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박영선·박지원 의원께서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의 국회 처리를, 그 당시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3명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셋 중의 1명이 바로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입니다.

원세훈 원장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지금 현재 대표가 구속돼서 수사 받고 있는 황보 건설의 서울시 공사 수주를 적극 지원했고 퇴임 이후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 대형마트의 사장 등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도 가고 미국 LA에 골프 회동도 갔습니다.

그 후 2007년 초에 이명박 후보의 상근특보로 보임을 받은 후에는 그 재벌 대형마트 사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모 사장은 행안부장관 취임 전까지 협력업체인 D 설계사무소의 대표를 시켜서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고 예쿠스 승용차를 렌트해서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대가가 있겠지요?

그 재벌 대형마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원세훈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재벌 대형마트 연수원 신축을 반대하는 부처—산림청입니다—에 압력을 행사하고, SSM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수사 요청을 했는데, 수사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그 당시는 국정원장이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발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보고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제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하는 글에 대해서 몇 개 사이트에 한정해서 조사하지 말고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유명 인터넷사이트 15곳에 올린 글을 수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없겠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트위터도 수사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특정 사안이나 그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모든 비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국정원 인터넷 여론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대북심리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메신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무려 660여 개입니다. 이들은 평균 2000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이들 계정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10개의 대장 계정,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접 글을 쓰거나 리트윗을 하는 PA요원급의 중간급 계정, 리트윗만 하는 보조 계정, 자동으로 리트윗만 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를 통하면요…… 어느 분이 그러셨지요, ‘70개 달아서 대선 선거 결과 영향 미치겠냐?’. 게시물 1개당 보통 최소 130만 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작성한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 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됐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22일 추가 고발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가운데 이모 씨 있었습니다. 맞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특정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진선미 의원** 이 직원은 트위터상에 ‘nudlenule’이라는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그런 말이 무색하

제도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12월 11일, 12월 11일은 발견된 때지요.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 야당의 대선후보를 중복으로 매도하고, 공약을 악랄하게 폄훼하고,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실행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다 삭제했지만.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5일입니다, “북한 편을 드는 대선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이군요.” 12월 11일입니다, “열받은 중복성골이 대선TV토론에서 판 자체를 몽개다가 사퇴도 못하고 완주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됐다.” 11월 22일, 11월 28일입니다. “금강산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중복주의자들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은 금강산관광 재개였습니다.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금강산에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고요. 아주……” 여기는 예의상 못 썼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이게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이기면 자신의 최고상부가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얘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10월 24일, “중복놈들이 단단히 북한에 발목잡힌 모양이다” “햇볕정책 부활하겠다는 등, 금강산관광 다시 하겠다는 등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10월 15일입니다. “김·노 친북정권 10년간……” “중복 청소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네요” 대선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장관님,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께 여쭙어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검찰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이것은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의 기본적인 법적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어떤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진선미 의원** 예.

○**법무부장관 황교안**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용이 어려운,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 법률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수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원장 여전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중복좌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중복좌파가 정권을 다시는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댓글활동을 지시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도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며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나옵니다.

장관님, 이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 장관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혐의 재판 진행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무려 기소가 3년이 흐른 지난 6월 10일에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들었습니다.

○**진선미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비적 공소장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논의되었던 것들 중 일부에 관해 1심 판결에서 다른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를 위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공소사실 특정, 기본이지요?

○**법무부장관 황교안**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유지라니요? 불법 정치자금을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예비적 변경 신청한 것입니다. 부끄럽

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1심 판결이 그와 같은 설시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공소장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장관님, 열심히 하는 검찰 구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하는 정치 검찰 처벌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정원, 경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국정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이나 정치세력이 함부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유혹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개혁하여야 합니다.

김용관 서울경찰청장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경찰의 권위 역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 단추가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만 지키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성의 있는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4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의 수사로 그것이 터무니없는 모략이 아닌 실제적 진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그때의 그 말씀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뉘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침묵으로 용인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에도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을 동안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던 정당은 누구입니까?

국정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을 ‘야당의 기획극’이라고 주장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익제보자를 괴롭치로 몰아 몰타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질적인 구태정치입니다.

부디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왜,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의원

으로 있는 것입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진 의원**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원 사건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 수사가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진위 여부보다 정치적 쟁점이 더 많이 부각되어 편파적 공방이 계속되고 여론이 호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걸까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언론 보도를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이 간부회의 등을 통해 중북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국정원의 정당한 중북세력 대응 활동이 결과적으로 야당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으니까 이것이 선거개입의 의도로 보아야 된다고 실은 검찰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어느 의원님이 진정 중북좌파라는 말씀입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은 아직 어떤 결론의 내용을 발표한 일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의견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의진 의원** 여직원 감금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공당의 당직자가 사법권을 행사했습니까?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법에 저촉되는 바가 없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일반 국민께는 저촉되는 법들이 공당의 당직자라고 해서 법을 집행하는 데 주저를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주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도 철저하게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 상식적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한 여성을 44시간 동안 감금하는 일이 정말 이해가 됩니까?

(「감금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서 저희들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범죄자 아니야, 범죄자!」 하는 의원 있음)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매관매직을 담보로 한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직 직원 김 모 씨 등입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여러 가지 항목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 저런 점들을 다 포함해서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 지금 민주당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처럼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자신들의 선거전략에 가담시킨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민주당의 국정원 매관공작 사건입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실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직 국정원 직원을 매수하여 국정원 내부 정보를 빼내서 선거공작에 이용하려 한 민주당의 국정원 매관공작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낱알이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검찰은 정파나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철저하게 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 장관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가야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과 1여 년 전에 제가 병원에서 진료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 돌짜리 아기가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늦어서 왔는데 이 아이가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로 하루에 5시간 이상 혼자서 놀았습니다. 결국 이런 기기들을 다 치우고 부모와 잘 놀게 했을 때 6개월 만에 정상발달로 회복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병원을 찾지 않은 유아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얼마나 많을지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에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들 디지털기에 정말 코를 박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디지털기기를 늘 접하는 사람들의 뇌, 디지털기에 중독된 사람의 뇌는 보시다시피 보통 사람들의 뇌와 기능에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뇌를 가진 사람들은 팝콘처럼 툭 튀어 오르는 자극에는 빠르게 반응하지만 일반적인 작은 자극에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학계에서는 팝콘뇌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기로 인한 이런 중독 폐해는 뇌 발달이 몹시 빠른 시기에 있는 유아에게 더 심각하므로 이제는 우리가 6세 이전 유아에게 스마트폰, 태블릿PC를 금해야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될 지경입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테크놀로지중독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기기에 의해서 중독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 2012년 정부 자료에 따라도 이런 디지털기에 중독되어 있는 5~9세 사이의 아이들이 자그마치 16만이나 된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디지털기기를 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서 인지 기능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학자들은 디지털치매라고까지 하고요. 실제로 요즘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다 보면 전화번호 외울 일도 없고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미국 신경정신과의사협회에서는 정신장애에 새롭게 인터넷중독을 진단병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광LAN을 깔았고 디지털기가 정말 아주 우수하게 사용되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테크놀로지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시스템이 어떤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우선, 잘 보시면 정부에서 이 관련사업 체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정책 수립의 기본사안인 실태조사가 부서마다 다릅니다. 심지어 인터넷 중독물이라든가 고위험군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혼란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행안부에서 하던 겁니다마는 지금은 미래부로 이관되어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여가부·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총리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의진 의원 그리고 치료·재활체계도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요, 국내에 시행되는 중독 프로그램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치료가 단기상담으로 대충 끝나기 때문에 고위험 중독군에 대한 치료효과가 사실 굉장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아이를 발견을 해도 입원 치료를 연계시킬 수 있는 병원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신 의원님 지적하신, 걱정하신 그 부분 상당히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는 권역별 치료의 협력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관련기관 간 치료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치유학교를 운영하고 중독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의진 의원 센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예방과 상담을 할 전문가들도요 보시다시피 부처별로 다릅니다. 굉장히 자격이 보건복지부 다르고 교과부 다르고 이래서 도무지 누가 전문가인가도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그냥 간다면 부처 통합도 안 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결과는 패배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신의진 의원 이러한 중독문제에 대해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제가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봤습니다. 여러 번 봤고 구석구석 봤습니다.

○신의진 의원 법률 내용 중에 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에 해당될 수도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를 들면 중독에 관한 광고의 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광고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도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항의……

그러니까 의원님의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동의합니다마는 법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더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의진 의원 광고 규제 하나가 산업 규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다른 부분들은 우선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하시면 이게…… 미디어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신의진 의원 잠깐, 제가 말씀 죄송하지만 그걸로 규제를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독이 생겼을 때를 규제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러니까 의원님 취지에는 저희도 적극 동감을……

○신의진 의원 취지가 아니라 법안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법안에도요 법이 평등성이나 명확성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 만약에 장관님 논리대로 하면 술을 즐기는 경우에도 우리가 중독에 이르게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기분 좋아서 몇 개 마시는 것은 아무도 규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신의진 의원** 제 법안은 중독 사안에 대한 것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업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이런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입법권을 폄훼한 것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업 발전만 중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국민들이 중독으로 괴로워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산업 발전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의원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의원 있음)

(「반성을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신의진 의원** 그렇지만 그러면 왜 제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게임이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 사과드립니다.

○**신의진 의원** 그러면 표현은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러면 의도는 어떻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법조항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취지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신의진 의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감사합니다.

○**신의진 의원** 다음,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5000만 명 중의 약 8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도박·마약 등 중독이 되어 있고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 해도 109조 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박근혜정부는 국민 안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4대악 척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 문제가 그 기저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중독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정책은 그 기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의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빙산 윗부분을 깨 없앤다면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4대악과 관련된 정말 심각한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위한 정부 시스템은 역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보시다시피 부처별로 다 따로 이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테크놀로지 중독을 포함해서 알코올·인터넷·마약 등 중독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총리께서 직접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이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각 부분의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지금 특성화되어 있는 관리체계가 앞으로 또 통합 관리하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연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신의진 의원** 4대악의 꼬리만 치지 마시고 그 몸통이 되는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중독과 관련한 그런 통합 관리하는 데 전향적인 입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신의진 의원** 다음은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2011년도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부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15년부터 모든 학교의 교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5년간 총 2조 2000억을 투자 계획으로 하고 있고 예산 50%가 스마트기기 보급 등 하드웨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이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이 아날로그방식에 비해서 훨씬 성과가 높다 그런 결론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계속 밀어붙여졌을 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입니다. 과거에 해 오던 교육 방법에서 스마트기기에 의한 선진화된 방법을 하자는 그런 장점을 따르자는 취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효과 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역기능 완화를 위한 연구에 투자를 확대할 생각으로 있고,

또 중학교 일부 과목을 적용을 하고 스마트기기 보급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의진 의원** 사실 디지털기기가 사람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신경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경우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일관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스마트 교육이 이름만 ‘스마트’지 오히려 ‘바보 교육’ ‘깡통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천천히 접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2011년 10월 22일자 뉴욕타임즈지 기사입니다. ‘컴퓨터를 쓰지 않는 실리콘밸리 스쿨’이라는 기사입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못 봤습니다.

○**신의진 의원** 바로 이 학교가 가장 첨단인 구글·애플 직원들이 근무하는 실리콘밸리 내 기업 직원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컴퓨터 이용 자제하고, 중2가 되어야지 컴퓨터 교육을 정식으로 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우수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향에 대한 검증도 없이 ‘스마트 교육’이란 이름으로 갑작스러운 확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반드시 학부모·학생·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우선되어야 되고요.

둘째는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몽땅 디지털 교과서로 바꾸겠다 이렇게 한 생각은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재정투자계획도 하드웨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좀 더 많은 부분이 세밀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문가를 교육할 수 있는 돈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의진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소개한 바 있는, 로버트 케네디가 캔자스 주립대학 학생들 앞에서 반세기 전에 한 연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GNP, 우리가 생각하는 GNP에는 대기오염과 담배 광고의 비용을 집어넣어 댔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로 가득한 도로를 정리하기 위한 앰블런스 출동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숲을 파괴한 부가가치, 아이에게 장난감 팔기 위한 폭력 미화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GNP에는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결혼 제도의 힘, 대중들의 논쟁에 담긴 지성, 공무원의 청렴 등의 가치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GNP에는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를 견인하고, 또 숫자로 나오는 GDP와 같은 지표를 쉽게 보여 주고 그것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지표들이 국민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창조경제로 대변되는 뉴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또 융합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 특히 아직 뇌가 빨리 발달하는 어린애들에 대한 부작용은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저의 이런 바람에 힘을 주는 지금 케네디의 연설을 여러분도 꼭 같이 한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신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문 응답 과정에서 약간의 고성이가 있었고 정부 측의 답변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은 품격 있는 국회를 원합니다. 질문이나 답변이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그리고 격조 높은 질문 응답이 될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광주 광산을 출신의 민주당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광주 광산구를 출신 민주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금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으로는 박근혜 정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드는 불순한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역사 왜곡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경제성장률을 1% 더 올리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이념이나 정권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벗어나서 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나라 안팎의 역사 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님,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임기 5년 동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총리님은 뭘 꼽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뭐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이용섭 의원** 소통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걸 소통하고도 관련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역사 왜곡, 역사 뒤집기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만약 역사 왜곡과 이념 논쟁이 본격화되면 박근혜정부 5년 내내 역사 바꾸기 세력과 역사 지키기 세력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우리 사회는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역사 왜곡 움직임에 제동을 걸지 않게 되면 역사 논쟁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결국 5년 후에 또 한 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개월 간의 박근혜정부를 보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묵인 수준을 넘어서서 방조하고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본 의원이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부 종편에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보수언론들까지도 비판할 정도로 허구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종편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역사 논쟁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국정원의 안보특강에 일베 회원들을 초청한 것도 저는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베 회원들은 보수진영에서까지 비판할 정도로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그런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이들을 초청해서 몇십만 원에 해당하는 선물도 드리고 점심도 주고 이렇게 배려하고 격려를 해 주니까 일베 회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뒤에는 국정원이 있다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역사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정원 안보특강 운영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9조에 저는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우파적 정치입장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사실상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강의, 이것은 명백히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 관여인 것입니다. 저는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혹시 총리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관이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금지 내지 제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오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의원** 동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방조사례는, 정부 고위직들이 역사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서남수 장관님 저기 나오셨습니다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5·16, 5·18 유신헌법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장관은 끝까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편 가르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셨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용섭 의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일부 헌법가치를 훼손한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용섭 의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정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총리처럼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 주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아이들에게는 '5·16은 군사정변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본인은 답변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세력들이 5·16 군사정변이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정부가 다른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역사 바꾸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 5월 22일 광주에서 열린 지역교사와의 간담회에서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님,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해 있는 사안입니까, 안 그러면 정치적 평가가 끝난 사안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 의원 끝난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용섭 의원 95년에 5·18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했고 97년에는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금년에는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기록물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사법적으로도 평가가 완결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치고 이보다 더 공식적으로 정립된 역사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교육정책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뒤흔드는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꼭 편협된 시각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꼬집어서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일어나는데 그 부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의원 그렇지요? 총리 입장에서 장관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느냐…… 저는 거두절미해서 저한테만 유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정부가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사례는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리적인 총리님께서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에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것은 본 의원이 박근혜 정권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역사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리,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대학수능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영역과 과목을 선택토록 하는 과목선택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사를 입시에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왜 국사를 채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은 대입제도가 지금 의원이 하시다시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강요하는 것은……

○이용섭 의원 지난해 국사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전체 응시자의 7%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성과 정의감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역사 속에서 이완용의 매국행위에 분노하고 성삼문, 안중근 의사의 충절을 배우면서 정의감과 애국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영어단어나 수학공식 몇 개 더 외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깨닫는 것이 저는 더 절실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수학과 영어보다도 국사과목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두 번째 제안은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이런 행위는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상당한지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중대한 역사왜곡을 없애기 위해서는 민·형사 소송과 같은 사후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독일이나 불란서, 오스트리아 이런 다수의 유럽 국민들도 나치 지배 하에서 행해진 대학살을 부인·찬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세 번째 제안은 국가보훈처장 해임을 통해서 역사왜곡을 부추기는 행위에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이상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5·18 기념식과 관련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킨 분입니다.

제가 볼 때 특별나게 뛰어난 분도 아닌데 왜 이분만 유일하게 유임을 시켰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보훈처장은 총리가 제청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용섭 의원 전혀 모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용섭 의원 보훈처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게 임명제청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임명은 안행부장관을 거쳐서 총리의 사인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가는 것입니다.

저도 공무원 한두 해 해 봤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보훈처는 총리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 소속의 보훈처장이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된 본인에 유일하게 유임되었는데 무슨 이유인

지도 모르고 사인만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것은 전문성과 지금까지……

○이용섭 의원 다른 분들은 전문성이 없어서 바꾸었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대과 없이 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 아, 무슨 대과가 없어요? 지난해, 지지난해에 그렇게 5·18과 관련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책임총리’ 아니시네요. 제가 보니까 ‘사인총리’시네요, 사인총리.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셔야지요.

저는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된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분쟁, 대부분 이분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이 정부가 진심으로 5·18로 빚어진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싶다면, 그리고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다면 저는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선 보훈처장을 해임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있는 한 5·18 관련단체나 유족들은 정부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울 것이고 내년도 5·18 기념식 때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반쪽짜리 행사에 그칠 것입니다.

총리님, 대통령께 해임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번에 5·18 공식 기념곡 제정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진의하고 좀 다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의원 아니, 해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는 해임 건의할 정도로 지금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섭 의원 어떻게요?

○국무총리 정홍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섭 의원 국민들하고 엄청난 시각차가 있네요.

국무위원이나 장차관급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진정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정권

에서 임명되고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계속 같이 가겠다 그 말씀이지요? 알겠고요.

저의 네 번째 제안입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하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규정하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헌법에 규정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 시에 논의할 문제이고요.

○이용섭 의원 그러니까 개정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헌법이라는 것은 정말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념곡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단체나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를 앞으로 많이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의원 87년 개헌 당시에는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이고 또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불의에 항거한 4·19와 5·18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넣게 되면 앞으로 5·18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논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야 된다는 이유가 참 많습시다만, 우선 1983년부터 5·18 기념식 때마다 30년간 불러 왔거든요.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잘 갖춘 한국 현대사의 소중한 무형자산이다, 5·18민주운동이라는 게 시민이 주도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게 순리이다, 운동권에서 불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념성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친북적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또 이런 노래가 있는 마당에 굳이 국민 세금까지 써 가면서 새로운 기념곡을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른 기념곡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분열과 갈등을 해소해 가야지 왜 이 정부는 분열과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는 얘가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 역사교과서의 왜곡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5월 달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 본심사 통과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용섭 의원 그런데 이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내용이 아직 공개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도 알 수 없는데 왜 국민들이, 특히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직까지 이게 집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밖으로 아직 노출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검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결과가 나오고 다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 의원 한국현대사학회의 회장과 역사교과서 위원장이 이 교학사의 집필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속해 있는 한국현대사학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포럼에서 2008년에 이렇게 출판한 대안교과서가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129쪽에 보면 김구 선생의 항일운동을 테러라 표현하고, ‘김구 선생이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인해서 살해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까지 돼 있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를 ‘근대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 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된 시기’라고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없도록 중요한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 보겠습니다.

이명박정부하에서 검찰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 좀

달라졌겠지’, 많이들 기대를 했습니다만 정치검찰과 기획수사의 구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권력 실세인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는 법무부 장관의 압력에 밀려 가지고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죄 입증에 어려워지니까 지난 3년 동안 주장해 온 공소사실과는 반대되는 새로운 내용의 공소장으로 변경신청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이용섭 의원 어떤 내용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공소장 변경은 오전의 질의 과정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용섭 의원 불법 정치자금은 누가 어디에서 주고받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 3년 동안 30차례의 공판 과정을 거치면서 ‘한명숙 총리가 직접 집 인근 도로에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심에서 무죄가 되고 2심에서도 무죄가 될 것이 걱정되니까 갑자기 지난 6월 10일 날 뭐라고 했느냐? ‘한명숙 총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비서가 받았고, 장소도 집 인근 도로가 아니고 지역 위원회에서 받았다’, 본질적인 내용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소권의 남용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 아직 허가 여부는 모릅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지엽적인 문제에 변경이 있을 때는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의 허가 여부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재판을 하고 있는 사안과 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여든 야든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든 야든 좀 신중한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용섭 의원 검찰에 촉구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항소 철회하십시오.

국회에서는 6월 달에 개혁입법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이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의 내용은 많은데 우선 보육 관련 질문을 하고 그다음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는 아시다시피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저출산대책으로서 매우 중요성을 가진 핵심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무엇보다도 소중한 정책 분야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만 0~5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과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드렸고 이어 대통령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재차 국민들에게 약속드렸으며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예산 미편성 문제로 인해 양육수당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보육시설들의 아동 학대, 안전사고, 불법행위 등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반드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올해 3월부터 만 5세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 무상보육이 지자체의 예산 과소 편성으로 중단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현숙 의원 작년 여야 합의로 양육수당 지원

이 결정되고 난 이후 국회에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증가분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상보육 예산의 9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보육예산 및 양육수당예산이 과연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정부 부담분 5607억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었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상당수의 지자체에서는 이것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좀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편성된 예산은 사실 보육료가 약 80% 수준이고 양육수당은 48%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에는 필요예산 대비 양육수당은 겨우 14%밖에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는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0~5세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서울시는 재정자주도가 90%에 달하지만 양육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만 편성해서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보다도 부담해야 될 매칭예산 비율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시 안에서 좀 자세히 보면 서울시 본청은 필요한 양육수당예산 1476억 원 중 겨우 120억만 편성했습니다. 본청은 8.1%를 편성한 것이고요, 서울시내 자치구는 26.6%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낮지만 서울시 본청은 예산 확보에서 더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리님, 서울시가 특별히 타 지자체에 비해 예산편성의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점에 대해서는 작년도 수준에 머물고 그 증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추가 재원을 마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

다.

○김현숙 의원 저는 지금 서울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2100억 원을 지금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 23조의 1%에도 사실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 관련 예산은 1조 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제가 확인했을 때 과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복지 예산 중의 하나인 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따라서 5월 말에 서울시는 양육수당이 소진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곧 서울에 사는 영유아는 무상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것은 작년에 약속한 대로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전체 건설 예산 등 예산에 비할 것 같으면 극소한, 극소까지는 아니지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 기재부에서 지자체에서 추경을 하면 그에 대해서 매칭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앞으로 정부에서도 추구를 하고 지방에서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자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여러 가지 논의가 오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와 지방의 재정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지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곧 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밝힐 문제고, 금년의 복지 부분은 약속한 대로 지방에서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 의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에도 사실은 김황식 국무총리께 제가 비슷한 질문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지원해야 할 경우 현재 지자체별 재정자주도와 복지예산 편성을 고려해서 좀 탄력적으로, 지금도 탄력세율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또 의도적으로 복지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앙재정과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야 됴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재정시스템 e-호조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이 구축 당시부터 정보교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김현숙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저희가 보기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 지자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의 실시간 집행률이 잘 점검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산정 시에도 통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못해서 저는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의 지원체계에 대해서 그냥 잘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정부의 예산회계 투명성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공감하고, 앞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분담을 결정할 때 그 문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다음은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해서 일자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보니까 조금씩 언급한 내용의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라고 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개인의 자발적 수요에 부응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라고 하였고 부총리께서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

는 취지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가는 일자리이면서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이기도 하며 정규직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좀 섞여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기회에 총리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제가 한마디로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또 사회서비스업 시간제를 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 또는 같은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전형,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의 전형을,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좀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다음에 70%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의 중심축이 여성, 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면 70% 달성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를 반드시 확충해야 되는데요, 공공부문을 포함한 여성 일자리 확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여성이 지금까지는 가정과 일의 양립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또 양육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다음에 단절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 의원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여러 부처를 관할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여러 부처에서의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에게 적합하고 그다음에 반듯한 일자리가 되면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대한 어떤 전형을 반드시 창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경력단절이 안 되고 가정과 일을 양립해서 할 수 있고 또 대우 받고 자랑스러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겠

습니다.

○**김현숙 의원**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국제공조체제, 아시아 공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만·필리핀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일본의 일부 양심 있는 정치인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 혼다 미 의원도 7일 날 위안부 기림비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외교 경색 등을 들어서 다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영국이 케냐 독립운동 당시의 피해자에게 보상한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외국과의 외교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를 쉽게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그동안 양자협의 개시를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재 회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이것에 응하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법률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일본의 새로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다음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관련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그 개정안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 부분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전문가들 분석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본래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입니다. 부가형이기 때문에 본형을 다 집행한 다음에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안 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징역형에 준하는 이런 형을 가한다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제출된 법안들 중에는 가족들에게까지 책임을 물려야 된다 하는 이런 안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걱정을 하던 연좌제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적인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국회에서 널리 감안하셔서, 그러나 추징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니까 적절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사이에라도 저희 검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징금의 집행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법리는 쟁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추징금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의원** 본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의 집권 세력들이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이제 와서 새로 출범한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중요한 것은 미납 추징금을 빨리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부의 잘못이나 이런 이야기보다도, 저희 법무·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에 있으실 때 당시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은 제가 알기로는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가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의지가 있었고 실행력을 발휘했다면 지금 이런 논쟁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에서는 추징금을 환수할 의지를 확고히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황교안** 저희가 특별징수팀까지 만들어서, 특정인에 대한 특별징수팀 만든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적·사실적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러니까 실용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환수를 해 주신다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황교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새 정부 들어서 저희가 보육료를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복지정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김현숙 의원님께서 눈부신 활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 계층 무상보육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당연히……

○**김현숙 의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숙 의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어린이집의 질적 서비스 수준, 양적 확충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적 서비스 수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가 하나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사정없이 때려서 온몸에 피멍이 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인지 시 신고의무가 있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사실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끊임없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파장속에서 특히 맞벌이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학대 외에 미신고 통학차량의 문제라든가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동안 어린이집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고 있고 또 양적 확대를 해 왔습니다. 다마는 그에 맞게 질적 성장을 해 오지 못했다 이런 점을 인정하고, 특히 아직도 그런 부정수급 문제랄까 아동학대 문제 또 차량사고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실태조사도 보다 더 광범위하게 하고 특별점검반도 설치해서 더욱더 관리를 강화하고 또 아동학대 방이나 차량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안심보육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린이집에 받을 붙일 수 없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 내지 관리 강화 또 실태조사, 특별점검, 전 방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 외에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청과물 시장에서 떨어져 나온 시래기를 갖다가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그다음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다 위조하고 유기농이라고 받아 낸 다음에 사실은 유기농이 아닌 음식을 먹여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음식조차도 문제가 되고 부정수급의 대상이 되고,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 식약처라든가 다른 어떤 부처와 협력해서 개선할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것도 일종의 부정수급을 하기 위한 방안인데, 그래서 먹는 것까지 그렇게 부도덕하게 한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고 저희가 전 방위적으로 전 부처가 범부처적으로 합동을 해서 꾸준한 실태조사도 하고 또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보공시제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국회에서는 최근 추경 때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을 증액했고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발의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은 굉장히 반대하고요, 제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찬성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저도 약간의 충돌되는,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과 CCTV 문제는 또 보육 공무원의 인권 문제와 약간은 충돌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가치기 때문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일 수는 없고 어린이집에서, 부모와 또 보육교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러한 CCTV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강화하기 위해서……

○김현숙 의원 좀 더 투명화하는 부분들을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중시에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한 관리 감독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당정협의를 한 번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진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에 국민께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세요.

우리가 오늘 아침 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가 당정협의를 했지만 중요한 국정 어젠다인 보육료 70%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새일센터도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여성 보육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부처와 논의하고 훨씬 더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어떠한 생

각을 갖고 계신지 청사진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자체의 업무 안에서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전 부처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저희가 여성 일자리와 여성 시간제 일자리에 관한 통계를 관리해 달라는 말씀은 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각 부처가 일자리 정책을 취함에 있어서 남성 일자리 여성 일자리를 구분해서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모니터하고 그 점에 있어서 여성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김현숙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경우에 시간제 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저희가 그때그때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여성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그다음에 총리께도 제가 부탁드렸지만 어떠한 형태가 과연 가능한지, 어떠한 근무조건과 급여와 그다음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을 반드시 공공부문에서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민간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고 고용률 70%에 갈 수 있는 가장 첩경은 결국 여성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다른 부처를 푸시하시고 그다음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예, 지난번 OECD 회의에 다녀왔을 때 선진 서구 유럽국가 중에서는 시간제 일자리를 반듯한 일자리로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도 있고 아직 비판의 여지가 있는 나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좀 분석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김현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운선** 고맙습니다.

○**김현숙 의원** 얼마 전, 1년 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무상보육을 국민께 다시 한 번 약속드렸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함으로써 무상보육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보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무상보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자체는 필요 예산편성을 미루며 무상보육 실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자체에서 돈이 없다고 죄 없고 선량한 부모와 영유아를 볼모로 삼아 정부와 국회 탓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진다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정부와 19대 국회가 끝날 때쯤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약속을 많이 지켰다’ ‘5년 전보다 내가 아이 낳고 키우기 훨씬 더 좋은 세상,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지만 바꾸려는 노력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무소속 비례대표 현영희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음식물은 남기지 않

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남기신 음식물은 바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 쓰레기의 31.6%를 차지하며 연간 550만t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가치는 약 20조 원에 달하고 추가적인 처리 비용만도 8000억 원가량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를 20%만 절감하더라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 1억 4800만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도 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은 885만t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의 18%가 내뿜는 양에 달하며 소나무 18억 그루가 흡수해야 되는 양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야말로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식량자급률 50%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낭비되는 음식물을 줄이는 일만이 식량안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줄곧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수립하여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서는 평소 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국무총리 정홍원**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영희 의원** 아깝다는 생각 외에는 안 드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처리 비용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비용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이런 것 좀 북의 어려운 사람들 줬으면 하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영희 의원** 정부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

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희 의원 본 의원은 정부의 예측과 정책 수행 노력을 성공적으로 과연 해 왔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년 1월에 발생한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의 현장입니다.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처리 단가를 둘러싸고 일부 자치구와 위탁처리업체 간의 이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와 업체 간의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우리나라는 2009년 런던의정서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부터 음폐수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었지요. 그렇다면 정부가 대처를 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실제로 2010년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음폐수 해양 투기 금지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문제 또 매립지,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등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처리비용 증가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 음폐수의 평균 처리비용은 해양 처리일 경우에는 4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그리고 육상 처리의 경우에는 톤당 7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육상 처리비용이 약 11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업자와의 그런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저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이를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하여금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육상 처리시설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화 시설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의 30%만 현재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지자체의 부담이 매우 큼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국가 재정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다음, 잠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한식 차림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저도 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감을 하고 음식점에 가 가지고 남은 음식을 많이 보고 한번 충고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 음식점 주인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차리지 않으면 대접받았다고 생각을 안 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상당히 우리 국민 정서 내지 의식의 개혁이 앞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습니다.

○현영희 의원 사진의 음식에서 먹고 남은 음식은 모두 어떻게 할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쓰레기 처리장으로……

○현영희 의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총리님께서 보실 때 어느 사진의 음식이 더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화면 보여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왼쪽이 당연히 많이 남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그렇지요.

다음은 한 외국인의 인터뷰를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외국인의 인터뷰에서도 보시다시피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음식 문화는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지요. 이는 푸짐한 상차림이야말로 진정한 대접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식의 세계화는 물론 한류의 확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상차림과 음식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점도 중요하지만 음식점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국민 전체의 인식 개혁을 위해서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문화가 확산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고 두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런 문화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총리님,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영희 의원**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저감 대책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2007년도와 2010년도에 종합대책을 두 차례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엔 소형 또는 복합 찬기를 보급한다든지 군부대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담는 대책이었습니다.

○**현영희 의원**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효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요.

최근의 통계를 보면 2007년도에 하루에 1만 4400t 발생하던 것이 2011년, 최근 통계입니다, 2011년도에는 한 1만 3500t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2010년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20%를 줄인다고 계획을 했는데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2012년도 통계가 현재 검증 중에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내년 초에 나오는데 그게 나와야 달성 여부는 판별이 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잠시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화면은 정부의 지난 4년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수치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2010년 종합대책 시행 후 10%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여 주시고 총리님도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푸짐하게 대접을 받아야 대접받았다 하는 느낌을 갖고, 그다음에 음식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 통계에 의하면 열 가구당 음식점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너무 과당경쟁이 되다 보니까 손님 유인책으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현영희 의원** 정책 시행 초기에 정책 드라이브를 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실현 의지가 줄었던 것은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지를 이렇게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TV 상업광고도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호소력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영희 의원** 이러한 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며 감소 목표를 또 다시 20%를 설정했습니다.

장관님, 환경부는 매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20%라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감량 목표인 20%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지난 정부에서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로 이렇게 굳어진 것이고 우선 그것을 달성하는 게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과거와 같이 반복해서 설정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20%는 상당히 의욕적인 목표기 때문에 그 달성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영희 의원** 그러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19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의 경우에 1992년도에 사용을 개시했을 때는 2016년 정도면 사용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대책들, 그다음에 국민의 인식 전환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만 해도 현재 상태로는 2016년이 아니라 2044년까지 쓸 수 있는 정도로 용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현격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도입하게 한 겁니다.

○**현영희 의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것을 줄이는 겁니다.

○**현영희 의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영희 의원** 발생량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현영희 의원** 그러면 이번 쓰레기 종량제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장관님,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아직도 지자체마다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 전국 144개 지자체 중 129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그러면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방식은 중앙정부가 권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선

택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는 스티커나 칩을 붙이는 방식이 88개 지자체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이 RFID, 자동적으로 계량하는 방식이 21개소, 전용 봉투를 쓰는 게 20개소 그렇습니다.

○**현영희 의원** 지금 RFID 방식이라는 게 전자 태그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한 장비나 서버 구축 비용은 대당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당 한 129만 원 들어갑니다. 그중의 30%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175만 원 정도 됩니다.

○**현영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넘는 고가 장비라고 생각하는데 재원 마련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당초 계획은 금년까지 지원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에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영희 의원** RFID 방식으로 서울시 전체를 바꾸면 약 44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RFID 방식을 시범 실시한 구가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그런데 해 보니까 기계 작동의 오류, 장비 사용 불편함, 비용의 증가 등이 문제 되어 가지고 장비를 전량 회수하고, 폐기처분하고 다시 기존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사용 초기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서울의 몇 개 구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되는 지역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교훈을 전달하고 또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께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장관님, 음식물쓰레기를 분류 배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영희 의원** 왜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음식물은 첫째, 우리는 식량자급률이 불과 한 23%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도 연간 20조 원 가까운 음식폐기물이 버려지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그만큼 우리가 선용을 한다면 수입도 줄일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좁은 국토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영희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나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하지 않은 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일 위의 그림이 생강 껍질, 파 뿌리, 녹차 찌꺼기, 계란 껍질, 고추씨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 할 것은 어느 것이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파 뿌리나 뭐 녹차 껍데기 정도……

○**현영희 의원** 파 뿌리, 녹차 껍데기?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 녹차 찌꺼기.

○**현영희 의원** 녹차 찌꺼기?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영희 의원** 장관님, 여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분류기준표입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런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에 대해 이해가 잘 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사실 예를 들면 쌀의 껍데기, 왕겨지요, 또는 뼈다귀, 이러한 가져가서 퇴비라든지 사료가 되든지 이렇게 쓰기에 부적합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제거를 해 내야 되는데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딜레마이기는 한데 그렇게 혼합 배출이 되더라도 가져가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 할 때는 또 선별이 있어 가지고 선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완벽하게 분리된다는 것은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영희 의원** 그렇지요.

다음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느 사장님의 인터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알려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관님, 분류 기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또 지자체나 환경부나 이런 홈페이지에 그걸 게시해서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잘 썬냐 안 썬냐 이걸 가지고 국민이 판별하시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썬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잘 안 썬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른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영희 의원** 2013년도 음식문화 개선 및 종량제 정책 홍보 계획안을 보면 종량제에 대한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에 대한 홍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분류 기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동의합니다.

○**현영희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상업 광고 또는 지하철 광고 또 이런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장관님, 저는 식당에서 식사한 뒤 음식이 남으면 가끔 싸 오는 편인데 장관님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님이나 환경 측면에서는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 음식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중간에 식중독 사고가 나면 이게 또 분쟁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 환경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람직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남은 음식을 싸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영희 의원** 그러나 실제 음식점에서는 장관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생상의 이유 등으로 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저는 싸 가시는 분의 책임하에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중독을 일으킬지 안 일으킬지는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 요인이 되는 건데 식당 주인이 없다 있다를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한번 식중독이 나면 그 식당은 한 3개월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싸 가시는 분이 자기 책임하에 하는 방법으로 법제가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영희 의원**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영희 의원** 이에 반해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는 춘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남은 음식 싸 주고 싸 가기 운동의 일환으로 각 음식점에 지원하고 있는 포장용기와 포장지입니다. 춘천시는 이 운동을 통해서 2011년 환경부 주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약 5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 사례에 대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우수 지자체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제가 아직 그 소상한 내용을 모르는데 한번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덧붙여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협력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한 업소나 단체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정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영희 의원** 주무 부처인 환경부의 주도하에 범국민적 인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교육은 유아·초중등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동의합니다.

○**현영희 의원** 식생활 습관 역시 이 시기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릴 때 음식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 음식물을 남기거나 버리는 일 등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통해서 평생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은 각 학교의 자율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마는 교육부 차원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희 의원** 본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럴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영희 의원** 부모 교육도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학부모 교육이 병행되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영희 의원** 예,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영희 의원** 본 의원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할 때 진정한 민생 정치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각 단체, 기관, 학교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석** 현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 출신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의원입니다.

요즘 남북관계 개선도 어렵고 경제 상황도 어렵습니다. 무더위에 전력난까지 겹쳐서 서민들의 삶은 고단하지만 그래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의 시처럼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새 정부가 잘되도록 해야 대한민국이 잘되고 국민의 행복도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책임과 사명으로 국민에게 새로운 힘이 되고 희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일깨워 봅니다.

먼저 총리님께 물음을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첫 국무총리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국정 수행의 본격적인 업무 체제가 완전히 잡혀진 것이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명수 의원**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국정 운영의 큰 틀은 마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처 간에 협업 체제를 강화하는 문제, 또 갈등 과제를 해소하는 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너무 차분하고 신중한 관리형 정부다.' '수비형 정부에 머물지 말고 뭔가 국민의 열망을 적극적으로 지펴 나가는 좋은 의미의 공격형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박병석 부의장, 이병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일부에서는, 물론 국정 로드맵이 있겠지만, 너무 단기 현안에 매달리고 있다. 균형 감각과 종합적인 시각이 더 필요하다. 공기업 등 정부 핵심 산하기관의 리더십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명수 의원** 총리님, 벌써 6월입니다.

다음 달부터 하반기가 되는데, 하반기 국정 주요 방향과 과제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무엇보다도 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명수 의원** 일자리 창출, 지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새로운 노력과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큼 내각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가보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로마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융성과 보훈 기능의 강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로서 국가보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의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를테면 선진국 상당수가 장관급인데 우리는 차관급에 머물러 있고, 조직에 비해 기능이 과다하고, 무엇보다 보훈 대상자의 경제적·사회적 예우가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보훈 대상자 수당 지급엔 이 정부가 왜 그렇게 인색한지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 당시에 이미 검토는 했겠습니까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예우와 지원이 앞으로 더 확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예, 뭐 말씀은 그러신데, 실제 그런 정부의 의지나 계획이 실제 반영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는데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말씀을 반복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보훈에 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정말 전향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 또 6·25 참전하

신 분들, 상이군경, 베트남 참전자 중에 연세가 많아서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실 분들, 이런 보훈 대상자 분들에게 좀더 적극적인 예우와 복지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총리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 전향적인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한 사항입니다.

뭐 총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충청권의 지역 현안 사업이 아닙니다. 창조경제와도 관련된 중장기적인 나라의 국책사업이 분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전반적인 추진 체계와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정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얼마 전에 미래부에서 대전시의 기초과학연구원, 이게 IBS입니다. 이거를 기존의 거점지구에 입지하지 않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이거를 이전해서 옮기겠다, 이런 의견을 묻는 문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기존의 거점지구의 규모나 내용은 달라지는 겁니까,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지금 기존 거점지구에 산업단지 기능을 넣는다고 하면 문제는 기능지구의 산업단지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문제가 또 연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거나 보고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 문제 해결되면 부차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과학벨트 문제는 국가와 대전시 간에 그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미뤄 왔습니다만,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물 부담을 포함한 대안을 가지고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습시다마

는……

○국무총리 정홍원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만약에 IBS를 엑스포공원 부지로 대체할 경우에 기존 거점지구 규모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 정홍원 없도록……

○이명수 의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고맙습니다.

○이명수 의원 또 다음으로 몇 번 논란이 된, 소위 부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명수 의원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부담하고 싶어도 부담할 능력도 없거니와 이 사업의 성격이나 이 사업의 상징성으로 봐서 당연히 국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시 어떤 논란의 거리로 만든다는 자체가 아쉽습니다.

거점지구 부지매입비 이것은 분명히 국비로 해야 된다고 미래부장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믿기에 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총리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이게 재정에 관한 문제가 돼서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균형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지방에도 그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는 것이 균형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의견 조정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진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그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미래부장관이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국비 부담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도록 총리님께서 감독하고 점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명수 의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말 제대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짜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식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식의 추진이 되어

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직접 챙겨 주시고 보완하고 점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총리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독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명수 의원 독도가 단순한 섬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오지섬에서 독도까지는 158km입니다. 지금 동해 해경이 관할서인데 동해 해경에서 독도까지 240km입니다. 배로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독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하면서 일본측의 해상보안서보다 우리가 더 먼 거리에 지휘 기능이 있어서 제대로 임무가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인력·예산 뭐 다 조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울릉해양경찰서의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또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글썄, 인력 증원, 예산 그것은 뭐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적어도 독도를 지키는 해양경찰서가 동해에 있어서는, 일본의 해양부서, 이 관련된 부서보다 더 멀리 있는데 독도에 관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 제대로 접근이 되고 관리가 되겠느냐, 6시간 이상 배를 이동을 해서 관리가 어렵거든요. 울릉해양경찰서 꼭 좀 신설해 주시고요.

아울러 서해상의 중국 어선과 마찰이 많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이명수 의원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보령해양경찰서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인력·예산 불구하고 신설이 되도록 총리님께서 직접 지시하고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예산이 뒤따르는 문제가 돼서 제가 뭐 선불리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우리나라 재정규모로 봐서 이 해양경찰서 하나 신설하는데 그 정도 부담을 느낄 거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울릉·보령 해양경찰

서 이 문제를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그렇게 알고, 답변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교육부장관님께 물음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 인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간의 일본 지도층의 역사왜곡과 부정, 중국의 동북공정과 청사공정……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치열한 역사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나마 이런 활동을 하는 데가 바로 동북아역사재단입니다.

우리 장관님, 최근에 동북아역사재단에 직접 가 보거나 직접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그런 사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연구 인력이 얼마 있는지, 과연 제대로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명수 의원 이렇게 역사 문제가 강조될 때 한번 직접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실제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직접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조치가 좀 바르게 돼야 되겠지요.

단순, 이런 동북아재단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역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기관 간의 어떤 종합적인 네트워크……

우선 이 상고사, 고대사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문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젊은 인재들을 역사 전문가로 양성할 것인가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일본하고 중국에 직접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역사왜곡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파악해서 좀 적극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동북아역사재단을 직접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데, 장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꼭 그렇게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말로만 역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행동으로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상징적인 것이 바로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데, 장관님 견해와 조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검토는 하시는데, 이것 검토 여러 번 한 건데요, 수능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듣는 많은 의견은 ‘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조치해……

지금 현재는 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인데?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역사 인식에 대해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는 역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수능시험에 그런 과목을 반영을 했을 때는, 필수화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풍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역사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지, 또 대학입시제도가 갖는 여러 가지 영향을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갖고 올 여러 측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수 의원** 저도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를 가르치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간에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역사 교과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치를 하겠지만 교육부장관으로서도 필요한 관심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대학에 관한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합니다. 양적 확대, 규모 중심에서 질적 추구, 교육품질 제고로 대학 중심에서 학생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에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로 일부 지방대학 캠퍼스의 수도권 이전을 승인하고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잘못된 조치입니다.

적지 않은 지방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 이전할까 이것을 타진하고, 캠퍼스 변경도미노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수대학원이나 평생교육원 이런 기능은 몰라도 캠퍼스 자체를 다시 수도권으로 옮긴다 이게 과연, 이것을 허용해 주고 승인해 주는 교육부의 조치가 과연 바람직합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사안은 사실은 교육부의 어떤 지방대학 정책하고 관련이 있기보다는요, 주한미군 주둔지였던 그 지역에 상당히 큰 공동화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법률안이 통과가 돼서 그 법률안 내용 속에 지방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수 의원** 장관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주한미군기지 그 공동화되는 것하고 이게 별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도 이미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 부분은 아마 송도 국제지역 거기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또 별도의 특별법으로 해서……

○**이명수 의원** 다른 대학도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교육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고 이런 지방대학에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부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새 정부에서 복지가 강조되고 강화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기능도 많이 더 늘어나고 커지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런 일을 담당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상태나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특히 최근에 자살사건으로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개선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복지업무 또 복지사업이 늘어나고 복지재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복지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해서 몇 분의 복지공무원들께서 자살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과중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공무원을 상당히 늘려 가고 있고, 이미 계획대로 늘려 갈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추경까지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총인원 1505명 정도를 늘려 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복지공무원은 늘려 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나 복지공무원만 늘려서 될 일은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행정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복지사업도 좀 간소화하고 그런 일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또 지방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복지공무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그 과중한 업무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러나 과중한 업무만이 복지공무원의 피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인이 와서 폭언을 하고 또 폭행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앞으로 복지공무원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이명수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늘어나고 수당 몇 만 원이 추가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1500명을 새로 모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언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언

제 교육시켜서 언제 배치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지금 금년 12월 중에는 배치할 계획으로 했고 그래서 원래 내년에 하려던 것을 466명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명수 의원** 배치한다고 금방 업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충분히 다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 문제는 기존에 업무 맡고 있는 것에 또 업무가 추가되고 있어요. 제가 읍·면·동사무소 여러 군데에 직접 알아봤는데 영유아보육 업무, 학교 학생 현장조사 관련 업무 이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위 잡 셰어링(job sharing)을 해야 됩니다. 여기 안행부장관님 계시지만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 복지센터로 바꾸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복지직이 담당하고 현장조사나 단순 관리기능은 일반 공무원도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거든요. 이 잡 셰어링을 빨리 해 줘서, 공무원 증원과 사기양양대책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의 복지업무 분담 및 기능체제 모델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건 이미 준비하고 있고요.

○**이명수 의원** 그런 것을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획기적인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이명수 의원** 다음은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줄기세포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이명수 의원** 미국과 일본을 필두로 해서 중국, 스페인, 멕시코까지 가세를 해서 세계적인 줄기세포 대란이 벌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달,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트 교수가 체세포 핵이식 방법으로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전문지 ‘셀(cell)’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연구팀이 성공시킨 기술은 2004년 황우석 박사가 먼저 만들었던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9년이나 앞섰던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로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윤리성과 찬반논란에 간혀 사실상 줄기세포의 연구에 문을 닫고 있었

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섰던 기술을 미국, 일본 등에 내주고 우리가 이 분야의 기술 종속국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머지않아 미국이나 일본의 줄기세포 치료 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원정치료를 받는 이런 상황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황우석이라는 개인을 보지 말고 이런 선진 첨단기술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선점하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여건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은 정부가 최우선하는 창조경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8년 전의 윤리적·과학적 시비, 법률적 판단,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이 생명 윤리법의 규정을 바꾸어서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 의원님의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성체줄기세포가 아니라 배아줄기세포를 말씀……

○이명수 의원 배아줄기세포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래서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용범위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난자나 어떤 배아가 상당히 생명과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어떤, 난자의 매매를 막는다든지 이런, 또 다른 한편의 가치를 위해서 그동안에 약간 제한이 돼 있었고 그러나 그런 제한이 너무 과학적 발달을 억제하게 되면 규제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것이 과학기술의 발달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이 연구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난자 사용도 냉동시킨 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국제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우리가 9년 전, 8년 전 상황에 얽매어서 계속 규제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기술의 진전은 없습니다. 좀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조치해 주시라는 걸 제가 건의드리고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노력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체계를 잡아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노력들이 제대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이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민주당 최민희 의원입니다.

방통위원장님!

요즘 버진아일랜드 조세회피자 해외 비밀계좌 명단 공개 건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세계가 인정하는 특종, 국내에서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민희 의원 다 못 아시면 얼마나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일부 명단 나온 건 있지만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 어느 언론에서 특종 했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최민희 의원 어느 언론에서 특종 했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그것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뉴스타파에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최민희 의원 이 세계적 특종, 박수받을 특종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 뉴스타파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아시는 게 뭐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특수한 미디어들은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국민 여러분,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종면, 김용진, 최경영, 최승호, 이근행, 이 국

보급 언론인들이 만듭니다.

왜 이 언론인들이 '뉴스타파' 하게 된 줄 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우리 사회에 감춰진 큰 비밀들을 찾아내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예, 그 정의로운 언론인들, 이명박 정권에서 해직당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님, 별가요?

총리님, 지금 화면에 사진 뜰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억나십니까, 이 화면?

○**국무총리 정홍원** 해고언론인으로 돼 있군요.

○**최민희 의원** 예. 우리 청문회 때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 함께 얘기 나눈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민희 의원** 그때 인권위가 어떤 권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총리실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최민희 의원** 그 시행한다, 어떻게 하라는 거였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시행……

○**최민희 의원** 예,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 관련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때 국무총리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권고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 국무총리 되셨지요, 지금?

○**국무총리 정홍원** 예.

○**최민희 의원** 그동안 하셨습니까? 뭔가 하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난 5월 달에 공직기강 점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공개를 하고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YTN 해직언론인들 지금 원상복직 원하거든요. 총리실에서 지원해야 되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복직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 약속된 것은 아니고요.

○**최민희 의원** 인권위 권고가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그것까지, 복직을 지원하라고까지 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피해자

가 원할 경우 국무총리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까먹으셨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하여튼 MBC, 여러 방송사의 해직이나 복직 등에 관한 문제는 언론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다른 개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YTN 해직 문제, 그러면 인권위가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YTN 해직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의 결과라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때 지원하라 이렇게 권고한 거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 인권위 권고 존중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 점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에 관한 자료 등 제출에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 자체를 정부에서 바로 하도록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어떤 일 하실 건지 계획 세워서 저에게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송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전부 제출하고 거기에는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마가렛 세카자 UN 인권옹호 특별보좌관이 'YTN·MBC 해직 사태 부당하다. 해결하라' 권고했고요. 국제기자연맹도 해직언론인 복직성명서 냈습니다. 해직기자 있다는 것 국제적 망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정청래 의원이 해직언론인 특별법 발의했거든요.

총리님, 관심 가지시고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정홍원** 인권특별보고관의 얘기도 노사 간 사내 문제에 관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 총리님!

○**국무총리 정홍원** 다만 이분이 얘기한 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하는 점에 유의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유의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저 자료 꼼꼼히 봤거든요. 지금 여기서 자료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저도……

○최민희 의원 박근혜정부 방송장악 할 겁니까, 이명박 정권처럼?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약속하실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물론입니다.

○최민희 의원 언론인 여러분, 박근혜정부에서 방송 장악이 없답니다.

그리고 총리님, 어제 우리 당 김춘진 의원께서 마무리를 못 하셨는데요.

기금운용본부 전복 이전은 공약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으로 나온 바는 없고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다가…… 저도 어제 그 질문을 받고 난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공약으로 이해를 하고 플래카드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 화면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플래카드는 공약 아닌데 왜 붙였을까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최민희 의원 아니, 공약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집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후보로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 논의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고 공약으로 채택된 바는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이런 플래카드 붙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걸었다가 공약집에……

○최민희 의원 그러면 실수했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빠졌다가 그 뒤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공약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은 아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국무총리 정홍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걸었다가 아닌 게 확인되고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 대선 관련 토론 있을 때마다 새누리당 관련자들이 나와서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총리께서 우리 전북도민들 우롱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시험에 빠뜨려도 되는 겁니까!

공약입니까, 아닙니까? 플래카드 왜 거셨습니까? 왜 토론회에 나오셔서 공약이라고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국민을 지금 바보로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공약집에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가 공약으로 채택되면 공약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집에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왜 플래카드 거셨습니까? 사기 치신 겁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 그 선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지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처음에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오해하고 건 것 아닌가 지금 그렇게 추리가 됩니다.

○최민희 의원 새누리당의 그 많은 분들이 다 착각해서 전북에 내려와서 공약이었다고 얘기하셨다는 지금 그 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5월 한 달 동안 방송사 대표들 어디어디 만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지상파방송, 지역방송, 케이블TV, 종편, 골고루 다 만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지상파 MMS, 그리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MMS는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면서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EBS나 KBS 같은 데에서 이것을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무슨 광고나 다른 지상파처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중간광고는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중간광고를 외주제작에 관해서는 외주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현재 지상파 쪽에는 중간광고 허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검토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5월 20일 종편 채널 사장들 만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최민희 의원** 뭐 건의하시던가요, 그분들이?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그분들의 건의가 앞으로, 애당초 출범할 때에 법적으로 미디어랩을 1년 후에, 내년까지 가입을 하라고 하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요, '8VSB'라고 이것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허용해 달라 하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송신료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 하나하나 볼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최민희 의원** 8VSB,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저는 8VSB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앞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서 국민에게 편익을 준다면 기술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가지고 얘기가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MMS 문제도 나왔고 나중에 8VSB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칙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중소 PP들이 종편 8VSB 도입 반대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왜 반대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그것을 도입하게 된 PP들은 아주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제외되는 PP들은 거기에 경쟁력이 뒤질 거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것뿐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글썄,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8VSB 대역을 종편들이 쓰게 되면 다른 중소 PP들은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좁아집니다. 이렇게 종편이라는 갑 중심의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요 중소 PP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통위가 힘센 쪽 편만 드시면 오해받지 않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 발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일반 원칙에서 말한 것이지 종편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 기술 발전에만 측면을 맞추면 그

것이 기술 매몰주의지요. 사회적인 것, 정무적인 판단 계속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지금 종편들 방송광고 판매 직접 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 종편과 똑같이 종합 편성하는 지상파방송도 역시 직접 영업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종편이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지상파방송도 직접 영업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미디어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미디어랩법 만들 때 종편에 미디어랩 유예의 특혜 줬지요? 그것 특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특혜라기보다는 모든 미디어가 새로 생길 때는 유아기에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3년을 유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민희 의원** 유아기라서 특혜 준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특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요, 모든 미디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지원책을 하게 돼 있는데……

○**최민희 의원** 특별지원책 준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여튼 국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뒤의 문제를 특혜를 줄 것인가 더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종편들 미디어랩 적용 유예 문제, 그 요구……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그것은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 방통위 입장은 뭐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국회의원님들 오늘 막강한 권한이 또 생기셨습니다.

그다음에 'SO들에게 종편 수신료 받겠다' 이런 요청은 하지 않던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그것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사실 어떤 채널은 송신료를 내고 어떤 채널은 송신료를 안 내고 하는 것은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SO와 계약에 의해서 되는 문제라고 생각

하는데, 저는 어떤 특정한 것은 차별을 받는다는 부분보다도 일반론적으로는 같이 원칙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구체적인 것은 SO와의 계약 관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 이런 뜻이신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꼭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 안 하실 건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아니면 팔짱 끼고 계실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띄워 주십시오.

중편들이 특혜 연장을 위해서 비밀TF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저게 나와서 알게 됐습니다.

○**최민희 의원** 5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TV조선 김 모 팀장, 채널A 이 모 팀장 등 7명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했고요, 5월 21일 날 같은 장소에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중편 4사에서 어떤 얘기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 ‘중편 4사가 수신료 협상 함께 하자’, ‘중편 혼자 하면 힘드니까 CEO, 편집인, 신문기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선이 방통위와 미래부를 맡고 동아가 BH 비서실과 미래수석실을 맡자’ 이런 얘기 했데요. ‘상대적으로 8VSB는 쉬우니까 단기 과제로 하자’, ‘미디어랩은 중기 사안으로 임원들에게 건의해서 결정하자’, ‘발행편집인 총괄들께서 국회 미방위원장 및 여야 간사 만남의 필요성 있다고 보고하자’……

그런데요 8VSB 관련해서 6월 초에 4사가 미래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정부에 협조와 압박을 가하고 기획기사를 내자……

위원장님, 혹시 6월 초에 어느 언론과 인터뷰 하셨어요? 인터뷰하신 일 있나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인터뷰는 많은 부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해서 8VSB 관련해서 긍정적 검토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8VSB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서 국민들이 좋은 화질의 TV를 볼 수 있다면 어디를 제한하는 것보다도 공개경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장은 이렇게 해 주셨고요.

미래부는 어떻게 했느냐? 8VSB 관련 중편 4사 비밀TF 1차 회의 결과가 있는 5월 14일 바로 다음날, 5월 15입니다, 8VSB 허용 여부와 관련해 연구반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5월 29일 각계 전문가로 8VSB 연구반을 구성해 1차 모임을 했습니다. 미래부가 중편지원부 같아요.

중편 회의 자료대로 그렇게 정부가 움직여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우리 방통위에서는 그것에 따른 행정부 내의 절차는 전혀 진행한 게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SO 수신료 관련해서 시험무대를 CJ로 잡자’, ‘CJ를 총체적으로 공략해서 어느 수준에서 CJ가 백기를 들면 그 이후에 각사가 사정에 맞게 개별 협상을 하자’, ‘CJ헬로비전 대표와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이것 어차피 무력으로 진압해야 한다’, ‘빨리 만나서 압박하자’, ‘CJ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밀어붙일 수 있다’, ‘CJ 지주사 대표와 만나서 발행편집인 총괄 네 분이 4 대 1 답관하자’, ‘100억 수준에서 MSO들에게 함께 압박하는 협상을 추진하자’……

위원장님, 이쯤이면 담합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업체들 간에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작전을 썼는지 실무적으로 아마 자기들이 검토한 것 같은데 자기들 지도부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것 확인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아니, 오늘……

○**최민희 의원** 발 빠르게 확인하셨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오늘 신문에 의하면 그렇게 된 것을 아침에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통위나 행정부에서 거기에 그대로 따른다, 안 따른다 하는 진행은 일단 전혀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시나리오대로는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업체들의 시나리오대로 정부가 따라가서는 안 되지요.

○**최민희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심지어 한 채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측 대표 결정은 무의미하다. 발행편집인 겸 총괄들이 다시 논의하자’……

이것 무슨 말입니까? 종편은 소유와 경영 분리 안 해도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글썄, 자기들의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평할 입장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 방송 승인심사 할 때 소유와 경영 분리, 심사자료에 들어갔을 텐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아니……

○**최민희 의원** 심사조건을 안 지키고 있는 건데?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서의 여러 가지 작전 내용을 저희들이 논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최민희 의원** 힘드시지요? 조금 더 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고맙습니다.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 종편 승인심사 자료 공개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 뒤에 방통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화끈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미적거리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미적거리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에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 어느 신문 출신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최민희 의원** 지난 5월, 5·18을 앞두고 채널A와 TV조선 등이 5·18 북한군 침투 날조 보도한 것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내용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내용에 관해서 제가 동의 여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 말씀 들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한 판단을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용 심의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바로 일부 결정이 나왔다는 메모를 제가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 메모 좀 얘기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메모는 그 내용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프로그램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났고 하나는 아직 심사 중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그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제가 여쭙 것은요 5·18 때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서 폭동을 일으켰느냐, 그것에 동의하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5·18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또는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국방부 발표에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현재 국방부가 정부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말이지요, 채널A 보도본부장이, 국방부가 발표했음에도 심의위원들에게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되받아쳤대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글썄, 정부의 발표와 일반 모든 사회에서의 합의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후배니까요, 그 정도 답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일부 종편이 말이지요 저를 중복세력의 핵심이며 김일성주의 확신범이래요. 노무현 대통령도 중복으로 볼 수 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저 중복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의원님이 당당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그런 것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닌

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냥 중복 아니라고 화끈하게 좀 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 중복같이 보입니까? 뿔 달렸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중복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종편들이 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할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글썄요, 방송사들의 자기 방송을 방통위원장이 사후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 국민들이 보시면 소신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 종편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제재받았는지, 법정제재만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여러 차례 경고 같은 것들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편은 열다섯 차례나 간 것도 있고 일일이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제일 적은 방송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법정제재만 종편이 총 합쳐서 81건입니다, 법정제재만. 그리고 채널A가 가장 많네요. 26건입니다.

종편 지난해 매출액 기억하실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매출액은 정확히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실이 더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백억에서 1000억 이상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말씀대로 채널A 800억 적자, TV조선 600억 적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방송 심의 제재도 많이 받아, 운영에는 실패해.

시청률은 어떤지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시청률은 1% 전후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랬으면 조금 나올 텐데, 대선 때 잠깐 그랬다가 평균시청률 아직도 0%대입니다, 애국가 시청률.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6월 6일자로 제가 판단해 보건대 1.25%에서 9.4%까지, 그래서 평균 1%가 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지금 2013년 5월까지 제가 받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제가 6월 6일자를 확인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평균요?

숫자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종편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보도까지 해서 국기를 흔들고, 법정 심의 제재도 굉장히 많이 받고, 운영도 형편없었어요. 시청률도 안 나와요. 이런 종편 지금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초기에 케이블TV나 다른 것도 1% 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청률만을 본다면 짧은 시간에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내용면에 있어서 여론의 다양성면은 좀 충족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종편이 원했던 종합적인 장르의 다양성 같은 데는 굉장히 실패했다, 전부 보도채널에 보도내용에 집중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다 보니까 좀 자극적이고 품위가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서 지난번 종편과 회합을 했을 때 품격 있는 종편이 돼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3년 전 종편 승인 심사할 때 심사항목 가운데 납입자본금 규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적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 혹시 기억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납입자본금 제일 낮은 것이 아마 MBN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 이건 낙제입니다. TV조선입니다. 만점이 60점인데 37.2를 받았거든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저는 액수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점수. 그래서 지금 계량화된 점수를 낮게 받은 곳이 주관적인 비계량화 점수를 높이 받아서 사업자가 되다 보니 끊임없이 시비가 있습니다. 재심사 제대로 하셔야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재심사는 내년 3월부터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앞으로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항목, 말씀하신 대로 내용 위반한 것 또 자본금 문제, 그 외에 미디어

장르의 다양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최민희 의원** 한마디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지금 어떻게라는 것보다 일단 전문가들로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의지를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요? 심사위원회 구성, 그 심사위원들 준비하면 그만이지 않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글썄, 로비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가뭇 두시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계량항목보다 계량화된 정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게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면 될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예, 동의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종편 심사할 때 계량항목 비중을 높여서 투명하게 해 주실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회 들어와서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익을 위한 특권과 특혜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 학연, 지연 등으로 엮인 특권 카르텔, 원전비리, 교육비리, 탈세 등등으로 나라를 쪼먹고 있습니다. 종편에 부여된 비합리적 특혜는 죄질이 가장 나쁜 특혜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들 가슴 속에는 정의감의 강물이 흐릅니다. 19대 국회에서 특권적 방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올렸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힘을 모아 주셔서 언론계 특권과 특혜를 철폐하고 언론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부의장 이병석**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금정 출신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이후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연명치료 결정 문제, 일본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는 우리 역사와 역사교과서를 바로잡는 문제, 대신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추진의지가 불명확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기환자 연명치료 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제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지금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권고안을 거의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월 중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권고안의 핵심내용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권고안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선 대상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대상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환자의 의사확인을 어떻게 하고 추정과 또 그 대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중에서 가족을 통한 의사추정 및 대리결정 내용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그러니까 본인에 사전에 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면 그건 본인의사를 존중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우선 추정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가족 2인 이상의 일관된 진술과 의사 2인의 판단을 전제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추정의 경우도 아닐 경우 가족 모두의 동의와 의사 2인의 판단으로 대리결정을 허용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기본적으로 특별위원회 권고안의 필요성 및 그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5월 28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관련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만 그 환자 본인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매우 낮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金世淵 議員**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암환자 635명 중에서 본인이 결정한 경우는 불과 4명, 즉 0.6%에 불과하고 나머지 99.4%가 가족이 결정한 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아직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명의료 환자에 대한 환자결정권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데 대해서 더욱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환자 본인에게 알리기를 꺼리는 문화이고 또 환자 본인은 물론 채 가족들이 대부분 그 환자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5월 24일에 국립암센터가 발표한 말기암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자료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전해 듣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환자 간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70%가 넘고요, 보호자들 경우에. 또 말기환자 가족 54%가 치료비 부담으로 저축을 거의 다 소진하고 있다는 이런 통계 등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면밀하게 해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지금같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간병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면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환자의 생명권이 경제적 문제와 연관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래서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 부담이 없는 경우에 환자가 결정해야 된다는 견해가 60%가 넘는 반면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50%에 육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자 의사를 모를 경우에 가족을 통해서 의사 추정 또는 대리결정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해서 연명의료를 중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러면 연명의료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동시에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저희도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혹시 구체적으로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병상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지금 현재 한 55개 기관에서 총 881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기관당 약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런데 통상 인구 100만 명당 50개 병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우리나라 4800만, 5000만에 가까운 인구를 기준으로 한 2500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필요 병상수의 3분의 1 정도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충분하지 않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선진국 사례를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완화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유사한 정책을 우리도 도입해야 될 필요성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우리도 차츰 선진국 사례를 봐서 우리나라의 완화의료서비스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世淵 議員** 잠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지난 30년간 매년 11월 백악관에서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달을 선언하고 관련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9

년 완화의료 법제화 이후에 병원 내 완화의료 전담팀과 전문병동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국이 1991년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가위원회에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 2000년에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라는 성명을 내고 말기환자를 돌보기 위한 기금 마련과 또 간병 가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도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래서 경제적 문제로 연명치료 중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와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각각 어느 시대에 편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고 고려사는 조선 세종에서 문종에 걸쳐서 편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삼국사기가 고려 건국이 된 지 227년 만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는 조선 건국 이후에 57년 만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 편찬사업은 대부분 정권 혹은 왕조가 바뀐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국가 차원의 중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조선시대를 조명하는 역사서는 언제 최초로 편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일본인들이 정한론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를 편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일본인 학자 하야시 다이스케라는 사람이 1912년에 ‘조선통사’라는 것을 발간했고 이것을 근간으로 일제 치하에서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1938년에 ‘조선사’가 편찬되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서를 편찬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잃게 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편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총리께서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발표한 ‘신교육칙어’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교육칙어는 조선총독부 총독이 발표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부조(父祖)를 멸시하도록 만들고,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한 후, 그때에 일본사적,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교육하면 동화의 효과가 클 것이다. 이것이 조선인을 반(半)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 지침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단군은 역사가 아닌 신화로 한다’, ‘발해는 한국사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 보신 적 있으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일제가 조선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로 작성한 지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또 역사서 편찬은 대부분 학자들이 회장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례인데 조선사편수회 회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당시 일본 정부의 정무총감이 겸임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학자가 아니었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金世淵 議員 정무총감입니다.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한 학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이완용, 권중현과 일본인 역사학자 한 20여 명이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이완용의 형 이윤용도 들어갔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이완용의 뒤를 이어서 중추원의장을 지낸 박영효를 고문으로 두고 우리나라 학자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역사까지도 건드렸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역시 우리 역사를 왜곡해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金世淵 議員**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대한 역사서로 삼국사기와 고려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들 경우에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식민지배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 삼국시대까지도 건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찬된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군을 정통의 시발로 보는 고조선은 신화입니까, 역사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이렇게 보는 역사서들이 삼국유사, 동국통감,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상당한 혼란을 느꼈습니다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한번 보시면,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된 고려의 영토가 왼쪽에 나와 있고 오른쪽은 현재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려의 영토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교과서에는 다수 의견이 집약된 정설 혹은 통설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수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역사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오른쪽 지도가 정설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사 지리지 서문을 보면 ‘우리나라, 즉 고려는 바다 동쪽 3면이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는 구절부터, 시간관계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북은 당나라 이후로 압록을 경계로 하였고, 동북은 선춘령을 경계로 하였다. 서북은 고구려의 지역에 못 미쳤으나 동북은 고구려 영토보다 더하였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림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북은 고구려의 지역에 못 미쳤으나 동북은 고구려 영토보다 더하였다’, 오른쪽 그림이 거기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고려사 지리지 서문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어렵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金世淵 議員** 이것이 우리 정통 역사인 고려사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화면을 하나 더 봐 주십시오.

화면은 동북9성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아래쪽이 일본이 주장하고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동북9성이고,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사료를 통해 검토된 동북9성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아직 명확한 학설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매우 혼란스럽지만 앞서 보신 자료는 고려의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만은 그 의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조선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500년 유구한 역사를 유지해 온 왕조라고 생각을 하고 한글 창조라든지 과학기술 발달 등 찬란한 민족문화를 이룩하였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1907년 시대하라 히로시가 ‘한국정쟁지’라는 책에서 ‘당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조선시대를 ‘당쟁사’로 규정했고 이 내용이 조선사편수회가 편찬한 조선사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관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사를 편찬했던 조선사편수회 인사들이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 편찬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렇다면 조선시대가 끝난 지 100년이 지났고 해방 이후에 68년이 지난 지금, 앞서 삼국사기와 고려사 편찬 사례를 볼 때 이제는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동의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러면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의 역사적 기록들과 조선사편수회 조선사 내용을 비교하고 동시에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발간된 역사 교과서들과 조선사편수회 조선사의 내용을 비교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사업에 즉시 착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동의합니다.

○金世淵 議員 이 정부 임기 중에 반드시 이 작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즉시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예, 알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감사합니다.

교육부장관 잠시 나오십시오.

방금 총리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실무를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전통 역사서들과 조선사편수회 조선사에 기반한 우리 현재 역사 교과서들의 내용을 비교해서 바로잡는 사업에 즉시 착수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바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고 착수를 바로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학계나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리고 최근 특정 출판사의 국사 교과서가 아직 최종 검정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쟁점화 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서남수 예,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중심을 잡아야 될 정치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녀사냥 식으로 집필진에 대한 인신공격성 자료 준비에 나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서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치적인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원리원칙대로 확고하게 일을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서남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 감사합니다.

○金世淵 議員 총리,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신공항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해공항이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金世淵 議員 부산에서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영남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항공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정부가 확정된 14대 국정 과제, 600개 세부 과제 그리고 공약가계부에 신공항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신공항이 지역공약으로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다만 지역공약은 국정 과제와는 별도로 타당성을 검토해 이행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언제 발표될 예정입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거기에 신공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지방공약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아시는 것처럼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될 문제기 때문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추진되는 그런 과제로서가 아니고 예비조사와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그런 과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어제 총리와 국토부장관께서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입지 타당성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議員 입지 타당성조사가 시기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연내에 실시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가능한 한 빨리 하도록 하겠지만 제가 또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고, 또 금년에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추경 때 수요조사 관련 10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수요조사와 함께 입지 타당성조사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예, 수요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확정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世淵 議員** 10억 원의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혹시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아니요, 예산 때문에 넘기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하여튼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예, 이렇게 계속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재차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꼭 살펴주시기를 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워낙 여러 지역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다소 지연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다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싶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金世淵 議員** 아시다시피 신공항 문제는 90년대 초반부터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갑을 관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갑을 관계라고 하기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상호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世淵 議員**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필요한 부분은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분권이 가능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현행 헌법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총리께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정홍원**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혹시 개헌에 대해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의 첫 질문으로 개헌 질문을 받으셨지만 저도 마지막 질문으로 개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권력구조 개편 등 다른 사회적인 논의비용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또 뚜렷한 이견이 존재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은 지금 즉시 착수해도 이미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정홍원** 지방분권 한 가지만 가지고 개헌을 할 수는, 어렵다는 점은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가 출범해서 민생문제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할 문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현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수도권·지방 간의 양극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과는 분리해서 지방분권 원 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 지방분권 문제가 개헌이라는 강력한 토대를 가지고 추진될 경우에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회와 또 지난 국회에서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개헌 논의가 일단 시작되면 정치권의 참여한 이해관계가 얽힌 관계로 모든

논의의 블랙홀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등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문제의 무리한 개헌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살리고 자기결정권에 근거해서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까지 다루는 큰 개헌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위한 작은 개헌이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석 김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4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섭씨 30도를 육박하는 의석에서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수도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의 건

투표 의원(190인)

찬성 의원(174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김경협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희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원석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서기호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우윤근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상현	윤진식	윤후덕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李宰榮	이종진
이종훈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몽준	정성호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주홍		

반대 의원(6인)

김영우	김용태	윤명희	이재오
정갑윤	주호영		

기권 의원(10인)

권성동	민병주	심재철	원유철
윤재옥	이진복	정문헌	정수성

정희수 조원진

(인재근 의원 표결기 조작 오류. 실제 찬성 의원 174인, 기권 의원 10인임)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영선	박원석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윤후덕	이노근	이만우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최경환	최규성	추미애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중학	홍지만	황주홍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5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경협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金永柱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재경
김재윤	김정록	김제남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김회선	김희국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병석	박성호
박성효	박원석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성범
신장용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종범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윤근	원유철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진식
이노근	이만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이인영
이자스민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임수경	장병완	전병헌	전정희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정성호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안민석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조경태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조현룡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최경환	최규성	추미애	한명숙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홍문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유정복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홍종학	홍지만	황주홍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출석 의원(27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성완중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경대수	고희선	권성동	권은희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장용
김광진	김기선	김기준	김기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안민석	안중범	안철수	안홍준
김상희	김선동	김성곤	김성주	안효대	양승조	염동열	오병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金永柱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유일호
김재윤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윤관석	윤진식	윤명희	윤상현
김종태	김진태	김진표	김춘진	윤재옥	윤진식	윤호중	윤후덕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형태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이석기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남경필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이완구	이완영	이용섭	이우현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이재영	李宰榮	이재오	이종걸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이중진	이중훈	이주영	이진복
박대출	박덕흠	박민수	박민식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박성효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이해찬	이헌승	이헌재	인재근
박인숙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백균기	장하나	전병헌	전순욱	전정희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몽준
				정문헌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조현룡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현영희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황영철	황주홍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22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기 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永 柱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재 경 김 재 윤 김 정 록 김 종 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형 태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민 수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성 효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지원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종 범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노 근
 이 명 수 이 목 회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룬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재 영 李 宰 榮 이 재 오
 이 종 결 이 종 진 李 宗 勳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이 한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하 나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몽 준 정 문 현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조 현 룬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회 최 재 성 추 미 애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지 만
 황 주 흥

○속개 시 재석 의원(92인)

김 경 협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준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회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국
 노 응 래 류 성 결 분 병 호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박 기 춘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지원 박 흥 근 배 기 운
 배 재 정 백 군 기 서 기 호 성 완 중
 송 광 호 신 경 민 신 계 룬 신 의 진
 심 재 권 안 철 수 안 흥 준 염 동 열
 유 대 운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정 복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윤 진 식 윤 호 중
 이 목 회 이 용 섭 이 우 현 이 운 룬
 이 원 옥 이 인 영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중 진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학 영 이 한 성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병 현 전 순 옥
 정 갑 윤 정 성 호 정 수 성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민 회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현 영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황 영 철

○산회 시 재석 의원(94인)

강 은 회 강 창 일 권 은 회 김 광 립
 김 기 준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주
 김 永 柱 김 을 동 김 제 남 김 춘 진
 김 태 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형 태 김 회 국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정 립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기 춘
 박 혜 자 박 흥 근 배 기 운 백 재 현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용 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심 상 정
 심 재 권 안 흥 준 양 승 조 오 병 윤

오 제 세	유 기 준	유 대 운	유 성 업
유 은 혜	유 일 호	유 정 복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이 강 후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李 宰 榮	이 중 훈	이 채 익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임 수 경
전 병 현	전 순 옥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의 화	정 희 수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민 희
추 미 애	하 태 경	함 진 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지 만		

○청가 의원(9인)

강 석 훈	김 기 식	박 수 현	신 동 우
우 상 호	은 수 미	주 영 순	최 봉 홍
한 기 호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정 진 석
입 법 차 장	임 병 규
의 사 국 장	전 상 수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홍 원
교 육 부 장 관	서 남 수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유 정 복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유 진 룡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진 영
환 경 부 장 관	윤 성 규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조 윤 선

○출석 정부위원

고 용 노 동 부 차 관	정 현 옥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이 경 재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국정조사특별	정우택	새누리당	2013. 6. 12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국정조사특별	정우택 김희국 이노근 류성걸 이완영 강기윤 박대출 문정림 김현숙	새누리당	2013. 6. 12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국정조사특별	김용익 김성주 남인순 양승조 유대운 이언주 최동익 한정애	민주당	2013. 6. 12
	정진후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국정조사특별	김희국	새누리당	2013. 6. 12
	김용익	민주당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쇄신특별	서용교	정몽준	새누리당	2013. 6. 12

○의안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신동우·이우현·안덕수·이노근·김태환·서상기·송광호·문정림·정갑윤·윤재옥 의원 발의)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박영선·우원식·이춘석·이종걸·김용익·이미경·최원식·최동익·박주선·박남춘·박지원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박영선·우원식·이춘석·이종걸·김용익·이미경·최원식·최동익·박주선·박남춘·박지원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박병석·서영교·부좌현·윤관석·배기운·문병호·김성곤·박주선·김광진·이인영·전순옥·민홍철·김기준·이해찬·박지원·원혜영·최민희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원혜영·김성곤·최재성·김경협·김운덕·인재근·김광진·백재현·홍의락·박주선·윤관석·진성준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상직·윤관석·김성곤·김기준·김윤덕·김영환·진성준·민병두·조정식·김영주·우원식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상직·윤관석·김성곤·김기준·김윤덕·김영환·진성준·민병두·조정식·김영주·우원식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상직·윤관석·김성곤·김기준·김윤덕·김영환·진성준·민병두·조정식·김영주·우원식 의원 발의)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민병두·추미애·박범계·최원식·김광진·우원식·홍종학·이종걸·박완주·인재근·김기준·박영선·최재천·원혜영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상직·윤관석·김성곤·김기준·김윤덕·김영환·진성준·민병두·김영주·우원식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민병두·추미애·최원식·우원식·문병호·홍종학·이종걸·박완주·인재근·김기준·박범계·박영선·최재천 의원 발의)
이상 11건 6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함진규·하태경·문대성·김상희·김경협·이재영·이명수·이종진·이현재·심윤조·원유철·김종태 의원 발의)
6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김제남·윤관석·김성곤·은수미·심상정·정진후·강동원·박원석·전순옥·서기호·남인순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희선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고희선·유승우·안홍준·윤명희·

홍지만·전하진·류지영·이재영·한선교·이재오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완영·안홍준·윤명희·김재원·경대수·주영순·김상민·최봉홍·송광호·정의화·김성태·박성효·유승우·이상직·전병헌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남경필·한선교·정세균·홍지만·김태환·서상기·김세연·이상일·유승우·송영근 의원 발의)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한선교·유승우·유승민·김태원·문정림·이노근·권은희·정갑윤·남경필·문대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서기호·김기준·박수현·박홍근·배기운·변재일·서영교·신경민·우원식·유성엽·윤후덕·이학영·전해철·최원식·최재성·최재천·추미애·홍종학·김제남·박원석·심상정·정진후 의원 발의)

6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유승희·장병완·노웅래·최민희·배재정·신경민·윤관석·김윤덕·강동원·이미경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강후·김진태·이우현·김형태·정수성·이진복·송광호·황영철·신동우·박성효·김한표·김기선·김광림·유승우·박덕흠·金永柱·노철래·손인춘·박대동·홍일표·권은희·조해진·심학봉·정문헌·서용교·이인제·정우택·이만우·홍지만·이명수·여상규·강은희·김을동·김상훈·신장용·이원욱·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재근·이목희·이인영·이학영·정호준·전순옥·최동익·유은혜·노영민·추미애·문병호·배기운·윤관석·김광진·설훈·홍종학·장하나·김용익·부좌현·서기호·민병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박병석·정호준·서영교·부좌현·배기운·김성곤·박주선·김광진·이인영·전순옥·민홍철·이해찬·박지원·최민희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조경태·전순옥·최민희·한정애·이만우·배기운·박인숙·오영식·임내현·배재정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조경태·전순옥·최민희·한정애·이만우·배기운·박인숙·오영식·임내현·배재정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민병두·추미애·박범계·최원식·우원식·문병호·홍종학·이종걸·박완주·인재근·김기준·박영선·최재천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강후·김진태·이우현·김형태·정수성·이진복·송광호·황영철·박성호·신장용·김한표·김기선·김광립·유승우·박덕흠·金永柱·노철래·손인춘·박대동·홍일표·조해진·심학봉·정문헌·서용교·이인제·정우택·이만우·이명수·여상규·강은희·김을동·김상훈·홍지만·이원욱·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6건 6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2015세계물포럼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3. 6. 12 정수성·이진복·김상훈·심학봉·홍일표·신경림·권은희·김정록·김희국·한기호·김한표·이현재·이강후·김형태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목희·심상정·인재근·유승희·홍영표·김경협·강창일·홍의락·이원욱·임수경·김성주·심재권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윤호중·윤관석·이미경·이낙연·김현미·홍종학·이인영·배기운·홍영표·강동원·최민희·추미애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문병호·변재일·김민기·김광진·이낙연·김재윤·부좌현·안규백·전순옥·유성엽·민홍철·정청래·김승남·윤관석·이미경·최민희·이상민·신장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춘석·이학영·우윤근·김광진·조정식·박영선·이석현·최원식·박범계·이찬열·안규백 의원 발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이인제·이강후·원유철·경대수·金永柱·문정림·최규성·송광호·김태흠·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13. 6. 12 신기남·강기정·한명숙·홍영표·우원식·김관영·박주선·도종환·박수현·이종진·이종걸·노영민 의원 발의)

6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혜정)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김익중)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임창생) 추천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나성호) 추천안

(이상 4건 2013. 6. 12 의장 제의)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2013. 6. 12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13. 6. 13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휴회의 건

(2013. 6. 13 의장 제의)

6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11일간)

○서면질문서 제출

고용환경개선, 하절기 전력수급에 관한 질문서

(2013. 6. 12 안효대 의원 제출)